

2014년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

2014년도 정세 평가와 2015년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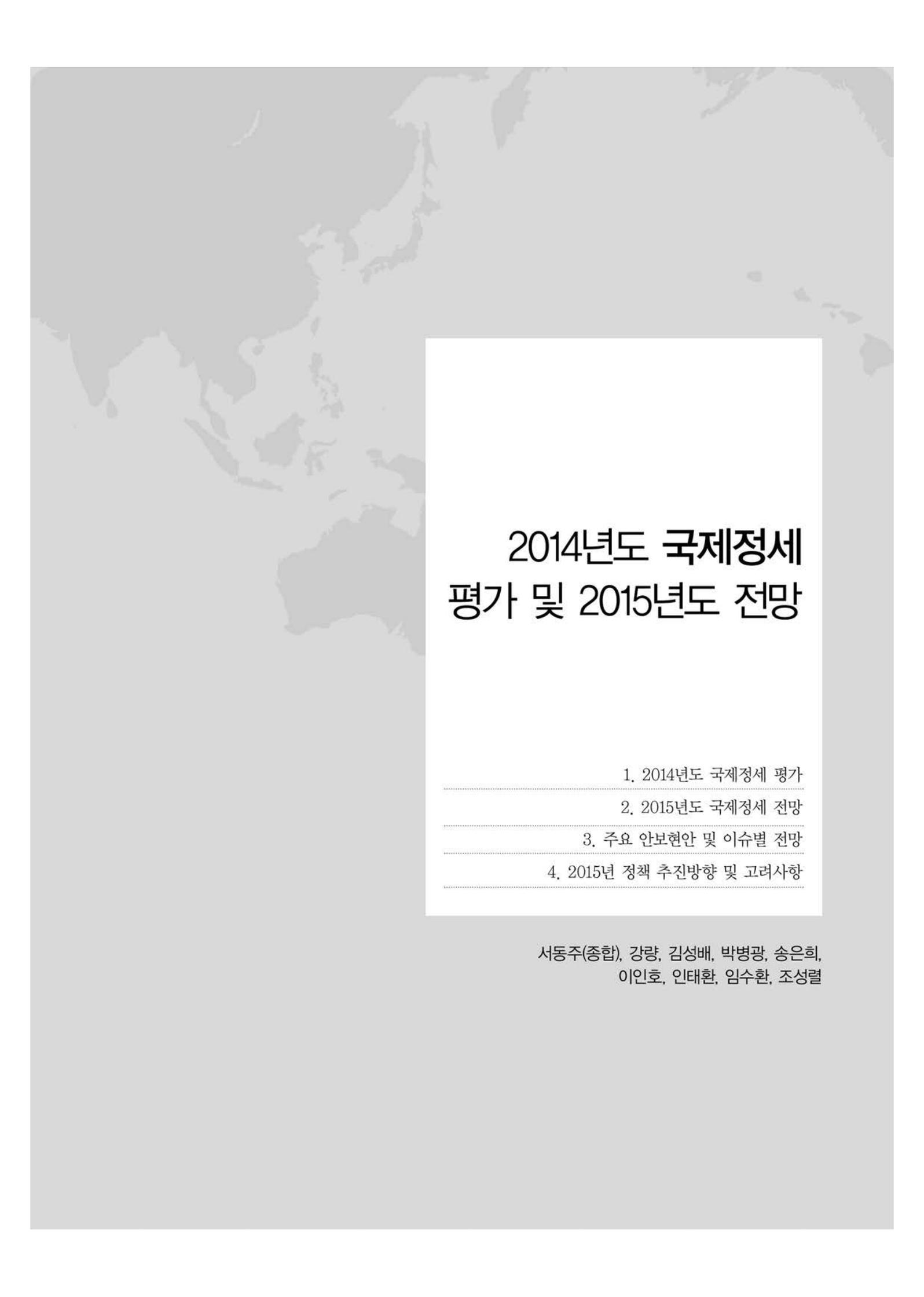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차

part 1	2014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5년도 전망	1
	요약	3
	1. 2014년도 국제정세 평가	14
	2. 2015년도 국제정세 전망	30
	3. 주요 안보현안 및 이슈별 전망	54
	4. 2015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61
part 2	2014년도 북한정세 평가 및 2015년도 전망	79
	요약	81
	1. 2014년도 북한정세 평가	89
	2. 2015년도 북한정세 전망	107
	3. 정책적 고려사항 및 제언	120



2014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5년도 전망

1. 2014년도 국제정세 평가

2. 2015년도 국제정세 전망

3. 주요 안보현안 및 이슈별 전망

4. 2015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서동주(종합), 강량, 김성배, 박병광, 송은희,
이인호, 인태환, 임수환, 조성렬

요약

1. 2014년도 국제정세 평가

- 2014년도 국제정세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등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서방측이 對러 제재에 나선 가운데 미·러 갈등 심화,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심화 등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주요국간 합종연횡이 지속
- ‘미·서방 對 러시아’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시리아 내전, NATO의 東進 등 주요 안보현안 및 핵안보정상회의(3월), ASEM UN, APEC, EAS, G20(11월) 등 국제 다자무대에서의 갈등 노정 등 新냉전 출현에 버금가는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노정
- 세계경제는 저유가 추이 지속하 유로존만이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탈출한 가운데 미, 일,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脫동조화가 심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도 확대
- 시리아 내전 지속, 이란핵 협상 담보, 이슬람국가(IS)에의 군사 공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 등 중동질서 불안정 지속
- 에볼라 창궐 등 국제보건, 이슬람국가(IS) 확산과 국제테러, 사이버 안보, 인권문제 등 초국경 안보의제가 부각되었으며 국제 사회에의 파급영향도 증대

- 동북아 정세는 미·중 간 견제협력이 혼재된 가운데 중·일 갈등 지속 하 역내 질서 재편에의 경쟁 심화, 센카쿠 열도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영토분쟁 지속,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 탈피 노선 전개, 복합 갈등 양상의 한·중·일 3국 관계 잠정 봉합 등의 특징을 표출
- 한반도에서는 연초에 고위급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회성에 그쳤으며,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투, 전단살포에의 고사포 사격 등 대남 도발 지속하 남북관계의 경색 상황 지속

2. 2015년도 국제정세 전망

- 2015년도 국제정세는 주요국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競協’ 질서 양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유라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싼 경쟁 격화,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 확산과 중동의 불안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 세계의 주요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행위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및 정체성 논리에 바탕을 둔 지정학적 현상들이 지속될 전망
- 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미국과 유로존 경제의 회복세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미약하나마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이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전망

- 동북아 정세는 세계질서 재편의 연계선상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의 재균형,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건축 주도 움직임 가시화, 중·일 간 대립의 지속과 조정 국면 등이 예상
- 또한 동북아 강대국 간 합종연횡식 외교가 전면화되는 가운데 김정은 체제의 실용주의 다변화 외교 지속, 북, 일, 러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 등의 특징이 발현될 것으로 예상
- 한반도정세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대남 도발과 대화의 이중적 자세를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인권과 핵문제, 6자회담 재개,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한·중·일 정상회담, 남·북·러 3각 경협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3. 4강의 對한반도정책 전망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신뢰에 기반하여 한미동맹을 유지·강화 하면서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한일관계 회복 및 한·미·일 3각 협력 구축에 적극 나서면서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도 압박할 가능성 지대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내세운 ‘경제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반대하는 한편 보다 강한 제재 중심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대북 인권 개선도 강하게 요구할 전망
- 일본 아베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회복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사를 둘러싼 현안의 조기 해결이 어려워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

- 북·일관계는 對中, 對韓 관계를 의식한 이해가 부합된 가운데 북·일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북 제재 해제 대상을 둘러싼 이견, 납치자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갈등 노정 가능성도 존재
- 중국은 한국과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및 성숙화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신뢰 구조 확립에 노력하는 한편, 한·중관계의 잠재적 갈등 사안 관리 및 포용적, 유화적 對한 접근을 지속할 전망
 - 북·중관계는 획기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대북 ‘비핵화 의지 천명’의 강력한 요구,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감 고조, 북한의 對中 경제적 의존도 심화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정은의 전격적인 訪中을 통한 북·중관계 정상화 시도 가능성도 배제
- 러시아는 한러수교 25주년을 맞아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한국기업 참여, 남·북·러 3각 경협이 현실화 등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는 한편 사드의 한국 배치, 對러 제재에의 동참 여부 등 잠재적 갈등 사안에 관심을 가져 나갈 것으로 전망
 - 북·러관계는 2014년에 보여준 접근 강화 및 밀접화 노력을 지속 견지하는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 개최 추진,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북한 철도현대화 사업 착수, 남·북·러 3각 경협이 활성화 등 양국간 상호 전략적 이해의 부합 상황을 계속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

4. 주요 안보현안 전망

-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한국식 해법과 전략적 인내 對 조건없는 재개’ 간 간극이 지속되어 향배를 가늠키 어려운 가운데 역내 국가들의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전망
-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문제:** 유엔에서 對北 인권상황에 대한 압박 수위가 확대되고, 유엔 이외의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대북 인권 견제 및 압박도 크게 확대될 전망
- **동북아 주요국 합종연횡 향배:** 합종연횡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핵위협 억지를 위한 한·미·일+중 4국 공조 지속 예상
- **사드(THAAD) 한국배치 문제:** 사드 한국배치는 추후 미·중관계 면모와 국내 여론수렴, 대중관계 등 제반 사안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
-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의 변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양국 간 경색국면이 해소될 경우 한·미·일 3국 안보협력도 복원될 가능성 지대
- **중국의 신아시아 안전관과 CICA 향배:** CICA 내에서 당분간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나, 아시아국가 중심의 지역안보 협의체로 발전하는 데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IS로 인한 중동 안보지형 변화:** IS의 확대를 막지 못했다는 미 조야의 비난 강화, 여소야대 상태에서 미 공화당의 파병 촉구는 오바마행정부의 점진적인 중동파병 정책 전환으로 반영될 가능성 지대
- **초국경 안보의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를 비롯해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식량안보, 인간안보, WMD 확산 방지 등 초국경 안보의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전망

5. 2015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가. 동아시아 질서 재건축 움직임에 능동 대응

- **역내 세력전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전략 수립:**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미중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의 축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내 세력전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전략 수립 필요
- **3대 외교정책 로드맵 실천을 통한 성과 제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대 외교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 구상과 실천을 통한 성과 제고
- **미·중 중심의 균형외교를 넘어서 동북아 전방위 외교 추진:**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기존의 균형외교 기조는 유지하되, 미·중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일본,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계

나. 한·미 전략동맹의 공고화

-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간 상호 충돌 극복:**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갈등할 수 있는 이슈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원칙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 긴요
-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 한·일관계는 양국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 구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익 증진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관리하고 증진시킬 필요
- **안보문제에 관한한 중국이 미·일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 안보문제에 관한한 중국이 미·일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對日 견제적 성격을 활용, 유기적인 한·미·일 관계 유지 노력 전개

다. 전략적 유연성 발휘하 주도적 대북정책 추진

- **주변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강화와 주도적 추진:** 주변국과의 대북정책 공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선도적 의지와 능력을 발휘
- **북한의 대남 도발 사전 제어 및 개혁·개방 유도 적극화:** 향후 김정은 체제의 업적 과시 및 대내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사전 제어 및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중·러 국제경협 활성화 등 국제규율 준수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적극화

- **인류 보편적 원칙하에 대북 인권정책 견지:** 북한 인권문제 접근에 있어 인류 보편적 가치 지향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 지속 견지 및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라. 한중, 한일, 한러 양자관계 증진 및 현안 해결 진력

- **한중관계 관련:** 시진핑 지도부의 주변국외교 철학을 적극 활용, 중국의 對韓 접근을 활용한 북한 변화 견인, 한국 주도 ‘소규모 다자주의’ 적극 활용 등을 추진
- **한일관계 관련:** 역내 현안의 ‘현상유지’ 원칙과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 추진, 비례성 원칙에 따른 한·중, 한·일 군사협력의 병행 등을 추진
- **한러관계 관련:** 한러수교 25주년 행사 및 한·러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한·러 간 1.5 트랙 전략대화 복원 및 고위급 인사 교류 증대, 남·북·러 3각 경협 성공사례 창출, GTI 등 소지역 다자협력의 활성화 도모 등을 추진

마. 경제안보 강화 및 국제경제 재편에의 사전 조응

-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불확실성을 완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과열 방지책 동시 추진, 對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 주요국 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외화유동성 확보 및 국내 자금 유출에 유의 등을 추진

바. 중견국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기여·공공외교 강화

- **중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 2015년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할 예정인 바 국제기구 진출 및 유치 확대, 다자회의에서의 외교 역량 발휘, 한국형 개발 원조 및 KSP 확대
-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공헌외교 전개:** PKO 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 평화·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 지속 수행 및 에볼라, 국제테러, 기후변화 등 초국경안보 의제에의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
- **문화산업 육성·지원 및 공공외교 확대:** 한류, K-Pop 등 문화 콘텐츠를 문화산업으로 육성·지원해 문화 수출 강국으로 도약 및 공공외교의 확대

〈2015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가. 동아시아 질서 재건축 움직임에 능동 대응

- 【역내 세력전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전략 수립】
- 【3대 외교정책 로드맵 실천을 통한 성과 제고】
- 【미·중 중심의 균형외교를 넘어서 동북아 전방위 외교 추진】
- 【미·중 양국에 대해서는 통일외교를 본격화】
- 【일본의 돌출적 외교 행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나. 한·미 전략동맹의 공고화

-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간 상호 충돌 극복】
-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
- 【안보문제에 관한한 중국이 미·일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

다. 전략적 유연성 발휘하 주도적 대북정책 추진

- 【주변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강화와 주도적 추진】
- 【북한의 대남 도발 사전 제어 및 개혁·개방 유도 적극화】
- 【인류 보편적 원칙하에 대북 인권정책 견지】

라. 한중, 한일, 한러 양자관계 증진 및 현안 해결 진력

(1) 한중관계 관련

- 【시진핑 지도부의 주변국외교 철학을 적극 활용】
- 【중국의 對韓 접근을 활용한 북한 변화 견인】
- 【한국 주도 ‘소규모 다자주의’ 적극 활용】

(2) 한일관계 관련

- 【역내 현안의 ‘현상유지’ 원칙과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 추진】
- 【비례성 원칙에 따른 한·중, 한·일 군사협력의 병행 추진】
-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안보분야로의 확대 추진】

(3) 한러관계 관련

- 【한러수교 25주년 행사 및 한·러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 【한·러 간 1.5 트랙 전략대화 복원 및 고위급 인사 교류 증대】
- 【남·북·러 3각 경협 성공사례 창출】
- 【GTI 등 소지역 다자협력의 활성화 도모】 외

마. 경제안보 강화 및 국제경제 재편에의 사전 조응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불확실성을 완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과열 방지책 동시 추진】

【對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 【주요국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외화유동성 확보 및 국내 자금 유출에 유의】

바. 중견국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기여·공공외교 강화

【중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공헌외교 전개】

【문화산업 육성·지원 및 공공외교 확대】

2014년도 국제정세 평가

가. 국제정세 전반

- 2014년 국제정세는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서방 對 러시아’ 간 대립 격화; ▲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을 둘러싼 주요국간 합종연횡 가시화; ▲ 국제질서 진영블록화 경향과 전략적 완충 국가의 중요성 부각; ▲ 이슬람국가(IS), 에볼라 등 초국경의제 파급영향 증대; ▲ 미, 일,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脫동조화; ▲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 등의 특징을 함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서방 對 러시아’ 간 대립 격화]

- 2014년 2월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해 1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되어 러시아로 도피한 가운데 투르치노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
- 3월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합병을 선언함에 따라 미국과 서방측이 對러 제재를 취하는 등 최고의 국제현안으로 부각
- 이후 국제정세는 ‘美·서방 對 러시아’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시리아 사태, NATO의 동진 등 주요 안보현안 및 핵안보정상

회의(3월), ASEM, UN, APEC, EAS, G20(11월) 등 국제 다자 무대에서의 갈등 노정 등 新냉전 출현에 버금가는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표출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까지 분쟁이 심화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반군, OSCE 간 휴전협정이 체결(9월)되었으나, 세부 이행을 놓고 갈등 및 상호 제재 국면 지속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을 둘러싼 주요국간 합종연횡 가시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질서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에도 미·중 및 미·러, 러·EU, 중·일, 러·일 등 주요국가들 간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경쟁 심화 및 새로운 관계 구축 노력 본격화

※ 현 세계질서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세력 재편, 패권전이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체제의 성격도 단·다극체제+G2체제+미·EU·러시아 3각체제가 혼재

-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對러 제재 주도, 이슬람국가(IS)에의 군사 공격, 에볼라에의 선도적 대처, 미-쿠바 국교정상화 선언 등을 추진한 반면 ‘제한적 개입주의’ 천명 등 국제적 영향력 제고의 측면에서 리더십 저하를 시현
-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등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무대의 주요행위자로서 ‘강국 러시아’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나, 서방측의 對러 제재에 따른 경제 침체, G8에서의 배제, 미국, EU와의 갈등 심화 등 국제적 고립에 봉착한 가운데 對中 관계 긴밀화 도모

-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對러 제재에 나서는 한편 G8에서의 러시아 배제, NATO의 동진 및 EU 확대 지속 등 역내 질서 안정과 영향력 제고 노력 경주
- 중국은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심화와 對美 공동 견제, APEC 정상회담 개최 등 국제적 영향력 증대에 나서는 한편 AIIB, RCEP, NDB, FTAAP, 신실크로드 추진 등 국제경제 재편도 적극 도모
-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 미·일·호의 대중 견제 체제 구축에 나서는 한편, 집단적 자위권 확보, 적극적 평화주의의 내세운 가운데 한국, 중국과의 역사 영토 갈등 지속 예상

[국제질서 진영블록화 경향과 전략적 완충국가의 중요성 부각]

- 미·러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정책 공조) 진용 간 블록 구축 노력이 보다 가시화 되면서 ‘미·EU·일·호주 對 러·중·SCO’의 진용 구축 양태가 부각
- 푸틴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미국과 러시아간 갈등 양상이 지속된 가운데 G7의 별도 개최, EU의 對러 제재 동참 및 對中 견제의 의미가 담긴 미·일 동맹 강화, 미·일·호 3각 공조 구축 등이 전개
- 반면 중국은 對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가운데 푸틴의 방중 및 가스협정 체결 등 러시아와의 전략 협력 지속해 나가는 한편, 중·러 모두 SCO, BRICS 정상회의를 활용한 정책 공조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력 견지

-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진용 구축 노력과 함께 우크라이나, 인도, 베트남, 몽골, 터키, 한반도 등 지정학적 완충국가(buffer state)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상승, 주요국의 합종연횡 주대상국으로 부각
 - ※ 우크라이나 사태도 EU와 러시아간 세력 편입을 둘러싼 갈등이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구애도 이의 대표적 사례
- 이밖에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 진행 중인 ‘유라시아’ 지역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거점 마련,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협력 벨트 구상, EU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 모색 등과 접맥되면서 새로운 전략적 대상지로 부각

[이슬람국가(IS), 에볼라 등 초국경의제 파급영향 증대]

- 기존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 집단들의 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리아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이 주축이 된 이슬람국가(IS)가 중동질서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
- 미국과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연방,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을 포함한 아랍국가들이 공동으로 IS 공습에 참여, 對테러 국제공조를 시현
- 한편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초국경의제인 전염병, 국제보건 문제가 중요한 국제현안으로 부각
-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해 국제적 긴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UN, WHO 등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EU 등 주요국들도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 정책 협력과 공조로 적극 대처

※ 미국과 UN은 에볼라 긴급대응팀을 가동하였으며, 한국은 WHO에 긴급 자금 조성 및 의료진 파견 지원

[美, 日,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脫동조화]

- 2014년 세계경제는 유로존만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탈출했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 경제마저 성장세가 정체 혹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세는 정체
-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반면, 일본은 내수 진작을 위해 양적완화 규모를 추가 확대했고, 유럽중앙은행(ECB) 및 중국도 확장정책을 지속하면서 주요국간 통화정책이 脫同調化
- 美연준은 미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판단 하에 증권매입 정책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한 반면, 일본 중앙은행은 전격적으로 통화완화 규모를 대폭 확대
- 경기부양 의지가 높은 유럽중앙은행도 시중에 유동성을 대폭 공급 했으며, 중국 정부도 하락세인 경제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위해 금리를 전격 인하(11월)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

- 국제금융시장은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는 반면, 일본·유로존·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각국 간 통화정책에 균열 발생

- 주요국 실물경제 상황 차이로 인해 2014 하반기부터 정책대응에 불일치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통화정책 탈동조화 현상이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대폭 확대

〈표 1〉 2014년 국제정세 주요 특징

구분	주요 특징
국제정세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서방 對 러시아’ 간 대립 격화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을 둘러싼 주요국간 합종연횡 가시화 ○국제질서 진영블록화 경향과 전략적 완충국가의 중요성 부각 ○이슬람국가(IS), 에볼라 등 초국경의제 파급영향 증대 ○미, 일,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脫동조화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
동북아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 전통적 안보질서 변화와 합종연횡의 심화 ○중·일 갈등 지속하 역내 질서 재편 조응에의 경쟁 심화 ○센카쿠 열도 및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등 영토분쟁 지속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 탈피노선 지속 ○북합 갈등 양상의 한·중·일 3국관계 잠정 봉합 ○한·일 군사협력의 불발과 한·미·일 군사정보보호약정 체결
한반도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관계 개선 모색하 북한의 대남 도발 지속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 이슈화와 대북 압박 분위기 창출 ○북한의 국제고립 탈피용 다면 외교 전개 ○THAAD를 둘러싼 미·중의 對韓 견제 및 잠재적 갈등 내재

나. 동북아 정세

- 2014년 동북아정세는 ▲ 동북아 전통적 안보질서 변화와 합종연횡의 심화; ▲ 중·일 갈등 지속하 역내 질서 재편 조응에의 경쟁

심화; ▲ 센카쿠 열도 및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등 영토분쟁 지속;
 ▲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 탈피노선 지속; ▲ 복합 갈등 양상의
 한·중·일 3국관계 잠정 봉합; ▲ 한·일 군사협력의 불발과 한·미·일
 대북 핵미사일 군사정보보호약정 체결 등의 특징을 내포

[동북아 전통적 안보질서 변화와 합종연횡의 심화]

- 미·중 간 견제와 협력관계 지속, 중·러 간 밀월관계 심화, 미·일 동맹 강화와 일본의 보통국가화, 중·일 간 과도경쟁으로 인한 갈등 심화를 비롯해
 -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 한·미·일 +중 4개국 간 북핵 공조 강화, 북·일 단독교섭 재개, 북·러 협력 증진 노정 등 역내 주요국들 간 안보질서 재편을 둘러싼 합종연횡 상황 전개
- 전통적인 한·미·일 남방 3각 안보체제에 대한 북·중·러 북방 3각 안보체제라는 상호 대립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가고 있으며, 미·중 양국의 G2로서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 수행에 대한 구심력 형성
-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대러시아 규제, 일본의 역사왜곡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공조 등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된 동북아 국가들 간의 합종연횡 심화
- 강대국중심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에 따른 세력균형에 입각한 현상유지 정황이 약화되고, 자국 이해중심의 외교안보적 조건 변수들 지속 생성

[중·일 갈등 지속하 역내 질서 재편 조응에의 경쟁 심화]

- 베이징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11월), 센카쿠 영유권 분쟁 이후 견제 위주 대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영토 분쟁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간 갈등 양상 지속
-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는 상호 견제 목적을 담은 전방위 정상외교를 경쟁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 ‘미·일동맹 강화 vs. 중·러 전략 협력 긴밀화’의 전략 구도하에 CICA에서 중국의 신아시아안전관 천명(5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각의 의결(7월),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첨단무기 개발 등 군사력 강화 등 상호 경쟁 심화

[센카쿠 열도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영토분쟁 지속]

-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섬) 분쟁은 2014년도에도 지속되었으며, 중국과 ASEAN 국가들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문제 등도 역내 최대 안보사안으로 부각
- 중국과 베트남 간에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해역에서 석유시추 문제를 놓고 물대포 공방에 이은 전투기 출격(5월) 등의 무력 대응 양상 표출
- 또한 필리핀이 스프래틀리(중국명 서사제도) 인근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선박을 압류하고 어민을 수감 조치하는(5월) 등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 국면도 노정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 탈피 노선 지속]

- 최근 일본은 재무장을 통한 보통국가화로 미·중 양강 구도의 고착 방지와 미·중·일 3강구도의 구축을 지향하는 동아시아전략 구사
 - 일본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에 대비해 독자적 재무장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동아시아 중·일 양강 구도의 시대를 지향
- 일본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고(7월)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시도하나 중국의 반발로 중·일 ‘신형 냉전관계’가 형성
 - 일본은 방위계획대강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해병대 기능의 창설, 해상보안청 체제 강화에 이어 보통국가에 한층 접근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용인, 자위대법 및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등 추진
- 한편 아베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 엔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시행해 대외경쟁력 향상과 수출증가를 시도하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에 직면
 - 엔저로 가격경쟁력이 되살아나 2014년 1/4분기까지는 수출이 늘고 GDP성장률이 증가했으나, 2/4분기부터 원가상승 따른 수입증대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GDP가 감소하는 등 한계에 봉착

[복합 갈등 양상의 한·중·일 3국관계 잠정 봉합]

- 일본정부는 2014년 말까지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외무성 차관출신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을 양국에 보내 사태 수습에 착수
 - 야치 NSC국장은 10월 한국을 방문, 종군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양국 국장급 협의를 갖기로 하는 등 양국현안에 대한 갈등 봉합을 시도
 - 11월에는 중국을 방문, 양제츠 외교담당국무 위원과 회동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섬)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선에서 양국현안에 대한 '4대 원칙' 합의로 갈등 봉합
- ※ 중·일 4대 원칙(11.7): ① 기존 4개 정치문건의 원칙과 정신을 존중하며 전략적 호혜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② 정치적 장애의 극복에 일부 합의, ③ 동중국해 긴장국면에 대한 이견을 인식하면서 정세악화 방지와 위기관리 시스템 조성으로 불의사태 방지, ④ 정치·외교·안보 대화의 점진적 재개로 정치적 상호신뢰 구축에 노력
- 베이징 APEC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시진핑 중국주석과 박근혜 대통령과 잇달아 회동하여 관계개선을 모색
 - 중·일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 일본이 정상회담으로 성격 규정하는데 대해 중국은 회동(중국어 會見)이라고 불려 이견을 드러 냈으며, 한·일 정상도 만찬회동의 수준에 머무는 등 갈등 해소에는 미흡
- 이처럼 일본 주도의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

※ 한·중·일 정상회담은 2008년부터 정례화했으나 2012년 5월 개최 이후 영토 및 과거사 갈등심화로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개최되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도 존재

[한·일 군사협력의 불발과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한·일관계 악화로 당초 추진되던 ‘군사정보보호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양국 군사협력이 불발로 그치고, 그 대신 미국이 포함된 한·미·일 3국 공동의 군사협력이 모색
 -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7월 하와이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처음 열린 가운데 주한 미 대사는 3국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를 주장
- 일본 각료회의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직후인 7월 21일 제주도 남쪽해역에서 인도적 차원을 내세운 한·미·일 ‘수색구조’ 해상훈련이 실시
 - ※ 한·미·일 3국 연합해상훈련은 2011년 7월 한·일 중간수역에서 첫 실시된 데 이어, 2012년 1차례, 2013년 2차례 실시에 이은 것으로 3국간 국방협력 시스템 구축의 일환
- 현재 중국의 반발 속에 주한미군의 고공권역 방위미사일(THAAD) 도입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향후 주일미군 BMD체제와 연계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추진도 배제 불가
 - 10월 23일 한·미 국방·외무장관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여 마침내 12월 말 한·미·일 대북 핵·미사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채택

다. 한반도 정세

- 2014년 한반도 정세는 ▲ 남북관계 개선 모색하 북한의 대남 도발 지속; ▲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 이슈화와 대북 압박 분위기 창출; ▲ 북한의 국제고립 탈피용 다면 외교 전개; ▲ THAAD를 둘러싼 미·중의 對韓 견제 및 잠재적 갈등 내재 등의 특징을 표출

[남북관계 개선 모색하 북한의 대남 도발 지속]

- 연초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 1차 고위급접촉과 이산 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나, 북한 실세 3인의 인천방문을 계기로 제기된 2차 고위급 회담 개최는 전단살포,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을 빌미로 未성사
- 박근혜 정부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 발표(3월), 8.15 광복절 연설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펼쳤으나, 북한은 ‘핵무력 및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견지한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투, 전단살포에의 고사포사격 등 대남 도발 자세를 지속
 - 북한은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을 담고 있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 및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북 ‘흡수통일’ 추진으로 인식, 대남 불신과 비방 자세를 견지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 이슈화와 대북 압박 분위기 창출]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내 반인도적 행위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최고 정부책임자를 제재하는 권고안 발표(2월)

-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COI 권고사항이행을 국제사회에 촉구한 가운데
 - 12월 18일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찬성 116, 반대 20, 기권 53표로 북한의 최고책임자를 ICC에 제소하는 안을 안보리에 요청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
-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 이슈화되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 분위기 형성
 - ※ 2005년 이후 매년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최고지도자를 ICC에 제소 권고하는 내용은 처음으로 북한에 큰 부담으로 작용
- 북한은 인권보고관에 조건부 방북 요청, 리수용 외무상의 UN 총회 파견 등 적극 대응에 나섰으나 인권결의안 통과 저지에 실패하였으며, 대북 인권결의안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크게 반발하는 양태를 표출
- 유엔 안보리도 12월 22일 찬성 11, 반대 2, 기권 2개국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대내 상황은 물론 남북한 및 동북아질서 변화의 주요변수로 부각

[북한의 국제고립 탈피용 다면 외교 전개]

- 6자회담 미재개 등 북핵문제 해결이 답보 상태에 머문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지속 견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중 관계의 악화 등 북한의 국제적 고립 상황이 심화

- 북한은 4월 리수용 외무상을 새로이 임명하면서 비동맹권 국가 방문, 일·러에의 접근 강화 등 국제 고립 탈피를 위한 다면 외교를 전개
 - 리수용 외무상은 5월 알제리에서 개최된 비동맹운동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였고, 8월에는 미얀마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 포럼(ARF)에, 9월에는 유엔 총회, 10월에는 러시아를 방문
 - ※ 리수용은 쿠웨이트, 감비아, 모잠비크, 레바논, 시리아를 방문하였으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도 순방
 - 강석주 노동당 국제비서는 9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순방에 나섰으며,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10월) 푸틴 대통령, 라브로프 외무 장관과 회동

- 북한과 일본은 5월 스톡홀름에서 북·일 국장급회의를 개최,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약속하고 일본이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지원 검토에 동의하는 ‘스톡홀름 합의’를 발표
 - 후속조치로 북한이 남북 일본인에 대한 전면재조사를 시작하기로 하자, 7월 4일 이에 상응하여 일본정부는 각의 결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결정
 - ※ 스톡홀름 합의사항: 납치문제 재조사와 맞물려 3개 분야(△인적 교류 규제, △송금 휴대반출 금액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 왕래차단)에 대한 제재해제 단행

- 북·일 접근은 일본이 한·중 양국과의 외교마찰에 따른 외교적 고립 심화, 북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탈출구로써, ‘납치자 문제↔제재완화’ 교환에 대한 북·일 양국의 이해가 부합

- 하지만 북·일 관계는 일본인 납치재조사 외에도 북한 핵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 폭발성 있는 외교현안들이 있어 급진전되기에는 장애요인이 산적

[THAAD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對韓 견제 및 잠재적 갈등 내재]

- 2014년 하반기부터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새로운 안보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사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이후 국내여론 분열과 중국의 對韓 견제 표출
-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사드의 구매와 배치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이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한국형 요격체계(KAMD)를 더욱 발전시켜나간다는 입지 강조
- 미·일의 군사전문가들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도와 사드배치의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면, 사드의 한국배치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위협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 강조
-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사드 배치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위협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며, 미중 대립시 사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눈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피력
-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석가들은 사드배치는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며, 배치가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 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의견 피력

- 사드의 한국배치를 놓고 미·중 간 견해 차이가 노정되어 있고, 이에는 지정학적 문제, 전략적 선택, 경제변수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의 향배와 관련, 한·미, 한·중 간 잠재적 갈등요소를 함유

2015년도 국제정세 전망

- 2015년 국제정세는 ▲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와 지정학 논리의 득세 지속; ▲ 강대국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경협’(競協) 질서 양상 강화; ▲ 유라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 격화; ▲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 확산과 중동의 불안정 지속; ▲ 저성장 기조속 세계경제 성장률 다소 상향 전망 등으로 집약

가. 국제정세 전반 특징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와 지정학 논리의 득세 지속]

- 지구화 시대를 맞아 자유주의 제도가 확산되고 초국적 협력이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정학의 부활” 현상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
 - ※ Walter Russel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e, 2014.
- 미국의 축소전략(retrenchment) 채택의 여파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고 강대국 중심의 국가 행위자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통적 세력균형 질서가 부각되는 조짐
 -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이념, 제도, 규칙 등이 아니라 적나라한 힘의 배분구도(power distribution)에 따른 국제정치 작동

- 다만 최근 중동 IS 사태에 대한 강대국들의 공동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사안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가 일정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임
 - 2015년에도 세계의 주요 분쟁지역들을 중심으로 역내 행위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및 정체성 논리에 바탕을 둔 지정학적 현상들이 지속될 전망
 -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2014년 11월 중간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등 자원의 제약이 여전히 여전해 다시 우세전략(primacy)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운 여건
 -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이후 국제질서는 몇 개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양극 또는 다극이 아니라 다수의 행위자들이 다양한 권력 자원들을 동원한 힘을 행사하는 무극(nonpolarity)으로도 묘사
- ※ Richard Haas, "The Age of Nonpolarity," *Foreign Affairs*, May/June, 2008.

[강대국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경협’(競協) 질서 양상 강화]

- 2014년의 특징적 현상이었던 미·중, 미·러, 중·일 등 주요 강대국 간의 경쟁과 대립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대립 일변도 상황의 지속은 부담으로 작용
- 2015년의 강대국 정치는 안보 딜레마를 중시하는 공격적 현실주의나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주장과는 달리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경협’(競協) 질서의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
- 미·중은 2015년에도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경쟁하고 양자 이슈와 글로벌 아젠다에서는 협력하는 복합적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대만문제, 티벳문제,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소위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비타협적 태도 견지 예상
 - 미국은 MD 체제 구축, 사이버 보안 등의 현안에서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맹체제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지속
 - 한편, 미·중 양국은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에서의 협력과 투자보장협정(BIT) 체결, 군사적 충돌 방지 등 양자 차원의 협력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 미·러관계는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국의 전략적 대립에다 최고지도자들 간의 불신까지 겹쳐 2015년에도 쉽게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나 극단적 대립은 자제 예상
- 러시아는 원유, 루블화 가치 하락에다 미국과 EU 등 서방의 對러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어 미국 및 서방세계와의 무한정 대립이 부담
 - 미국은 이란 핵문제, 시리아 내전, IS 문제 등 국제현안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해 對러 제재 확대에 신중 전망

[유라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 격화]

- 21세기 들어 유라시아 지역은 지정학·지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였으며 유럽,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인접 강대국들의 각축 무대가 되고 있는 바, 2015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

- 러시아가 EU의 동진정책에 맞서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 연합(EEU)이 2015년 1월 공식 출범하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참여 예정
- EU의 이스턴 파트너십 회의도 2015년 여름 라트비아에서 개최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참여할 예정이어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다시 러시아의 민감한 반응 예상
 - 향후 우크라이나의 최종적 미래가 유라시아 지역의 세력 판도를 좌우할 전망
- 중국도 2014년에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Silk Road Economic Belt) 정책을 2015년에 더욱 본격화할 전망
 -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에서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동남아의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묶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베이징 APEC 정상회의에서 재강조
- 미국과 인도 등도 유라시아, 중앙아 지역이 특정 국가의 세력권에 편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표 2〉 2015년 국제정세 전망

구분	주요 특징
국제정세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와 지정학 논리의 득세 지속 ○ 강대국간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경협’(競協) 질서 양상 강화 ○ 유라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 격화 ○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 확산과 중동의 불안정 지속 ○ 저성장 기조속 세계경제 성장률 다소 상향 전망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행정부 ‘재균형 전략’의 재균형 예상 ○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주도 움직임 가속화 ○ 중·일간 대립의 지속과 조정 국면 ○ 동북아 강대국들간 합종연횡식 외교 전면화 ○ 김정은 체제의 실용주의 다변화 외교 지속 ○ 북, 일, 러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 확산과 중동의 불안정 지속]

- 2014년 연이은 미국인, 영국인 참수로 국제사회를 경악시키고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공습을 초래한 이슬람국가(IS)의 행태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 확산을 예고
- IS는 오사마 빈 라덴이 지휘하던 알-카에다의 후신이기는 하나 단순한 소규모 테러 조직이 아니라 반군의 성격과 초국경, 초국가적 대안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수니파 무슬림들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초국경적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어 소탕되기 어려우며 미국을 중동의 늪으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할 가능성 지대

- IS 등 신유형의 테러리즘의 발현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이란 핵문제, 시리아 내전과 더불어 미국의 중동 재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들 전망

[저성장 기조속 세계경제 성장률 다소 상향 전망]

- 2015년 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저성장 기조속에서도 미국과 유로존 경제의 회복세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미약하나마 2014년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
 -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4년 2.2%에서 내년도 3.1%로 0.9% 포인트, 유로존은 2014년 0.8%에서 내년도 1.3%로 0.5% 포인트 각각 상승 예상
 -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3.3%) 대비 소폭 상승한 3.8% 예상(IMF)
- 그러나 유럽·일본·중국 등 다른 주요국들은 수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해 세계경제의 본격적 회복은 내년도에도 어려울 전망
 -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4년 0.9%에서 내년도에는 0.8%로 0.1% 포인트, 중국은 2014년 7.4%에서 내년도에는 7.1%로 0.3% 포인트씩 각각 하락 예상

나.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

- 2015년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는 ▲ 오바마 행정부 '재균형 전략'의 재균형 예상; ▲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건축 주도 움직임 가속화; ▲ 중·일간 대립의 지속과 조정 국면; ▲ 동북아 강대국들간 합종연횡식

외교 전면화; ▲ 김정은 체제의 실용주의 다변화 외교 지속; ▲ 북, 일, 러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 등의 특징이 발현될 것으로 전망

[오바마 행정부 '재균형 전략'의 '재균형' 예상]

-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에 따른 아태지역 중심 전력 배치가 러시아의 지정학적 도전과 IS 득세 등을 유발했다는 비판 비등
- 미국의 201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재균형 전략의 추진 동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
-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에는 미·러간 갈등과 중동문제에 대응하고 산적인 글로벌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해 對中 견제보다는 '신형 대국관계'에 적극 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건축 주도 움직임 가속화]

-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주변외교 공작회의'(2013.10.24~25)에서 '친·성·혜·용'(親·誠·惠·容) 원칙과 '운명공동체' 개념을 제시한 이래 동아시아 주변국 외교 공작에 본격 착수
 - 시진핑 주석은 2014년 5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및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친·성·혜·용'과 '운명공동체' 개념을 강조하고 '아태의 꿈'(亞太夢想)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
- 중국은 향후 미국 등 강대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경과 해상을 마주하고 있는 對주변국 외교에 더욱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

- 2015년에는 CICA의 발전, 일대일로(一帶一路, 21세기 新실크로드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축, 운명공동체 차원의 한·중관계 정립(한·중 FTA 발효 계기), 중·북관계 정상화 등에 주력할 전망

[중·일간 대립의 지속과 조정 국면]

- 중·일 간 대립과 긴장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 및 센카쿠 열도 분쟁을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했으나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정 국면에 진입
 - 11월 10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는 센카쿠 열도, 역사 인식 등에 관한 4개항에 합의
- 중·일 간 라이벌 관계는 역사적 뿌리가 깊지만 최근의 대립은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 미·중 간 패권경쟁 등을 배경으로 하는 전략적, 구조적 성격을 내포
 - 중·일관계는 양자적 요인과 함께 미중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
- 2015년의 중·일관계는 최근 몇 년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베 총리 외에도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나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

[동북아 강대국들간 합종연횡식 외교 전면화]

- 미국이 당분간 對中 견제보다 협력을 추구하게 될 경우 중·일관계, 러·일관계, 중·러관계 등에도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미국의 再균형 전략에 적극 편승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보통국가화 전략을 통해 對中 견제에 적극 나섰으나 미·중관계가 협력적 방향으로 가게 되면 중·일 대립 지속이 부담
- 러시아는 미·러관계 악화 대응차원에서 중·러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 일변도 외교는 러시아의 입지를 제약
- 2015년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접근할 가능성이 지대

[김정은 체제의 실용주의 다변화 외교 지속]

- 북한은 2014년 들어 과거의 주로 미·중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외교 행태에서 벗어나 고위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다변화 공개 외교를 전개
 -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9월 유럽과 몽골을 순방한데 이어 리수용 외무상은 15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러시아를 방문
 - 11월 17~24일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 친서를 전달
- 북한 외교의 대상이 과거의 미·중 양국 중심에서 일본, 러시아, 유럽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립 탈출과 최근 강대국간 세력균형 외교의 부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북한은 2015년에도 외교적 활로 모색과 정상국가 선전 차원에서 다변화 외교 노선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대남관계 개선도 지속 타진할 것으로 전망

- 북한에서 핵은 인공위성과 더불어 ‘자주’의 실체로 물신화되어 있어 통치 이데올로기상 완전 폐기가 사실상 불가능

[북, 일, 러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

- 아베 총리가 중의원 선거 재신임을 기반으로 평양을 전격 방문하여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질서 재편에 대응할 가능성
 - 최근 일본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일본의 상대적 입지 약화와 한국의 중국 경사에 대한 우려가 증폭
- 2015년에는 푸틴 대통령의 訪日이 예정되어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사할린 가스 공급과 북방영토 반환을 패키지 협상으로 제시할 가능성
 - 아베 총리 역시 북방영토 반환을 최대 외교치적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 미국의 압력을 감수하고 돌출 행동을 감행할 여지
- 푸틴 대통령이 방일 계기에 북한을 전격 방문하여 러·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가능성
 - 최근 최룡해 訪러 결과로 러·북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나 김정은이 중국에 앞서 러시아를 방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訪러가 성사될 경우 극동지역이 유력
 - 푸틴 대통령이 남북한을 연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제안하거나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을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

다. 주변 4강의 對한반도 정책방향

(1) 미국

[2015년 대내외 정책 전망]

● 대내적으로

- 2014년 11월 4일 미국 전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 12년 만에 상·하원의 과반수를 확보, 8년 만에 상·하양원 여소야대 구도를 형성
-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함에 따라, 레임덕을 맞은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정권과 의회 간 대립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
-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이민개혁법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 이민 개혁법의 시행을 두고 공화당과 대립 예상
- 요컨대 국내적으로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이민개혁법 등에 대해 수정 및 폐기를 꾀할 것이며, 이에 행정부와 의회는 상호 정책적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 지대

● 대외적으로

-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오락가락 외교정책’이라고 평가를 들을 정도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시현하면서 소극적인 외교정책을 펴 유약한 대통령을 각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이나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미국인 참수에 대해 제대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 '세계 리더'로서의 위상이 저하
-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은 동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인 만큼 유럽·중동지역의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나면,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의 여소야대 상황은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동북아의 양자 간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
 - 미·중관계는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對中 견제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가운데 공화당은 이런 오바마의 대중외교 형태에 대해 너무 유약하다고 비판
 - 따라서 향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견제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을 강력 추진하면서 중국 중심의 아시아투자인프라 은행(AIIB)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충돌할 가능성
 - 미·일관계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지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합의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악화와 중국에 명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불만
 - 오바마 행정부의 여소야대 상황 하에서도 향후 미·일관계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재정악화에 따른 일본의 국제적 공헌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

- 미·러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말레이시아 항공기 추락 등과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 제재에 앞서면서 국제사회가 동참하도록 촉구하면서 탈냉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악화
- 향후에도 미·러관계는 양국 리더십간 갈등, 러시아내 인권문제, 중동정책에 대한 이견, 핵전력 감축 등에서 갈등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바, 당분간 관계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미관계 전망]

- 한·미관계는 2014년 4월 공식 정상회담과 3월 한·미·일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
 - 한·미 양국은 매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동맹결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
- 또한 그동안 한·미 양국 간 주요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을 타결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2014년 1월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에서 분담금 총액이 작년보다 5.8% 증가한 9천200억 원으로 최종 타결
 - 그리고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까지 현행 체제대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재연기하기로 합의
- 향후에도 한·미관계는 신뢰에 기반하여 ‘역대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

- 추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한국의 TPP 가입 등의 현안 문제는 원만하게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 공화당의 의회 장악으로 한국이 망설이고 있는 THAAD의 한국 배치를 압박할 가능성

[미·북관계 전망]

- 미·북관계는 오바마행정부의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전 조치 없이는 미·북관계 진전이 없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북관계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음
- 오바마 행정부는 이·팔 사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느라 우선순위에 밀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
 - 2014년 하반기 들어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케네스 배, 매슈 토드 밀러)을 전격적으로 석방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 제스처를 보냈으나, 미국은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스탠스를 고수
- 역대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 공화당 우위의 미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한 제재 중심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 하원에서 7월 28일 가결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발의되었던 「북한제재강화법안」(HR1771)은 상원 과반수의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2) 일본

[2015년 대내외 정책 전망]

● 대내적으로

-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헌법 개정을 통한 전후체제의 청산이라는 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자위대법의 개정 등 안보정책 관련 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중참 양원의 장악을 시도
- 정치적으로 아베 총리는 지난 12.14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2015년 봄의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가을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재선출될 경우 2018년 9월까지 장기집권하면서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전망
- 경제적으로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2·3분기 연속 소비가 줄고 국채가 늘고 GDP성장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 속출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증
-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2014.12.1)는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한국·중국의 Aa3에서 1단계 낮춘 A1으로 강등했으며, 피치도 연내에 신용등급의 강등 가능성 존재

● 대외적으로

- 일본은 ‘아베독트린’을 통해 ‘법의 지배’, ‘항해·비행의 자유’ 등을 강조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중국의 해양 확장 정책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

- ‘적극적 평화주의’ 기치 아래 주변사태에 대한 개입능력을 높이는 한편, 安保다이아몬드構想을 통해 對中 포위망 구축을 추진
- ※ 아베 총리의 ‘安保다이아몬드構想’이란 중국의 진주목거리 전략에 대응하여 미국(하와이)-호주-인도-일본 잇는 해양연대를 구축하려는 전략
- 일본은 미국이 對中 견제보다 협력이 강화될 경우, 현 중·일관계에 부담을 느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에 나서고, 일·러 관계도 북방영토와 사할린가스공급 문제를 고리로 상호접근 가능성 존재

[한·일 관계 전망]

- 201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한·일 양국현안과 분리해 최근 갈등으로 점철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양측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관과 미국과 동맹이라는 공통점 공유 외에 북한 핵문제, 중국의 강압적 현상변경 정책 등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국제공조의 필요성 존재
- 하지만 종군위안부 문제, 독도영유권 등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간의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사안별 국제공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관계개선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05년 국교정상화 40주년 때 한·일 우정의 해, 공동방문의 해 행사를 공동기획하기도 했지만 일본은 『2005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최초 명기하고 순시선 출몰을 배증하는 등 영유권분쟁을 야기

- 한국이 한·미 전략동맹 강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미·일 3국 군사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 한·일관계 개선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한국은 중국과의 공조로 북한을 압박해 북핵문제를 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한·일 관계개선이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 네트워크의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 한·중·일 FTA에 앞서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고 일본이 주도하는 TPP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등, 당분간 한·일 FTA를 위한 양자 협상은 당분간 재개되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
 -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본협상 중단 이후 독도 갈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이후 RCEP, TPP 등 다자협상의 출현으로 동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

[북·일 관계 전망]

- 북한과 일본은 1945년이래 국교 없는 비정상적 관계가 70년 가까이 지속됐으며,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 방북으로 ‘평양 선언’이 발표되는 등 한때 관계개선 움직임도 있었으나 아베내각에 들어와 중단
 - 2차 아베내각에 들어와 채택된 ‘스톡홀름 합의’는 자유로운 인적 왕래가 가능했던 1차 아베내각 이전수준으로의 복귀를 의미할 뿐, 적극적인 북·일 관계개선 움직임으로 보기에선 시기상조

- 그럼에도, 북한이 핵개발·인권문제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고 일본도 과거사문제로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중에 북·일 관계개선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동북아정세에도 일정영향 불가피
 - 북한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 수위에 따라 대외무역액 15% (2013년 기준, 부분해제)~30%(전면해제)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며, 일본은 북한카드로 한국정부의 대일 태도 변화를 압박
- 이러한 북·일 관계개선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도쿄 소재 총련 건물 및 토지가 일본 부동산회사에 매각되면서 북·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
 - 하지만 일본측이 이미 대북제재 해제대상에 관해 △화객선 ‘만경봉 92’의 입항금지 조치, △총련 중앙본부건물 매각문제는 제재해제와 관계가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대북 파장이 그리 크지는 않을 전망
- 앞으로 북측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경우, 일본측이 정략적 고려에 의해 총련계 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 추가조치로 북·일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불배제
 - 6자회담과 북·일 협상이 재개되는 등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반면, 한·일관계가 여전히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일본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북측 요구를 추가로 수용할 가능성도 존재

(3) 중국

[2015년 대내외 정책 전망]

● 대내적으로

- 2015년에 시진핑 지도체제는 각 부문의 개혁과 反부패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의법치국(依法治國)’ 추진을 강화하며, 대테러활동 등 ‘사회 안전’에 대한 민중의 요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해 나갈 전망
- 중국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7% 이상 달성 목표에 매진하는 가운데 경제안정, 성장의 질적 수준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민생개선 등에 주력함으로써 국내지지기반 강화에 전력할 것으로 예상

※ 2012년 보시라이(薄熙來), 2013년 저우융캉(周永康), 2014년 쉬차이허우(徐才厚)사건 등과 같이 2015년에도 새로운 고위층 부패문제를 적발·이용하여 인민들의 부패척결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시진핑 개인권력 강화에도 활용할 전망

- 다만 반부패운동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표면화될 경우 현 지도부와의 대립구도 형성으로 인해 국내정치적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

● 대외적으로

- 2015년에도 중국 외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면모를 추구할 것이며, 특히 ‘21세기 신실크로드’ 건설과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주변국 관계 강화에 전력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수립 및 중·러관계 강화 등 기존의 대국외교 중시와 더불어 일본에 대해서는 압박의 수위를 조절 하면서 실익 추구하고 역내 영향력 확대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

- 동시에 중국은 내년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이하여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도덕적 우위를 강화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전망

[한·중관계 전망]

- 중국은 한국과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및 성숙화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신뢰구조’ 확립에 노력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 및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일례로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내 각계 전문가 및 연구기관들에 대한 접촉과 연구지원을 통해 한·중 간 쟁점이슈에 대한 국내의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에 유리한 여론조성을 시도
- 중국의 동아시아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최근 상승하는 추세인 바, 시진핑 지도부는 내년에도 한중관계의 잠재적 갈등사안 관리에 노력하면서 포용적이고 유화적인 對한국 접근을 지속할 전망
 - 그러나 중국의 접근은 “조건이 분명한 호의”로 볼 수 있으며, 언젠가는 중국이 호의적 접근에 대한 ‘대가성 계산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관리의 긴장을 요하는 부분
- 2015년에도 중국은 사드(THAAD)배치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자국이 주도하는 AIIB의 한국 가입 및 ‘신아시아 안전관’에 대한 지지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요구와 압박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하는 우리정부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미·중간 역내 규범경쟁이 가열될수록 우리의 선택의 딜레마도 가중될 전망

[북·중관계 전망]

- 2015년에도 중국은 전통적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지 천명’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김정은 방중의 전제조건으로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비핵화 의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한 김정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
 - ※ 그럼에도 2015년에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訪中으로, 북일교섭 및 북러 관계 강화, 북미관계 돌파 등에 한계를 통감한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북중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
- 내년에도 북·중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접근 및 북·일 교섭 등에 대해 중국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감은 더 고조될 가능성 내포
 - 그러나 만일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적극적 ‘손 내밀기’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의 조짐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중국 역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내년에도 북한은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의존도 탈피를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지만 ‘신압록강대교’ 완공 및 ‘국경 무역’ 확대 등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구조적으로 강화될 전망

- 북한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감소 및 민생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더 경제개선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조치들이 시험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이의 성공여부가 북·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4) 러시아

[2015년 대내외 정책 전망]

● 대내적으로

- 푸틴정부는 對러 제재 여파에 따른 루블화 가치 하락, 해외로의 자본 유출, 경제성장률 저하에 적극 대처하는 가운데 스푸트니크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NGO 활동 억제, 반정부 시위에의 대처 등 사회적 안정과 기강 확립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나아가 푸틴의 정치적 리더십과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는 가운데 애국주의, 법치를 내세우며 정책 비효율성 제거, 부정부패 척결, 보건, 연금, 주택, 교육 등 국민 복지 향상을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대외적으로

- 푸틴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실용적 신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견지하는 가운데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측의 對러 제재 완화와 효과 상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출범, CIS에 대한 영향력 유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의 관여, 중러관계 심화 등을 통해 EU,

동유럽, 중앙아, 동아시아로 이어지는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재편에 적극 조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나아가 UN에서의 역할 제고 및 BRICS, SCO, G20, APEC, EAS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슬람국가(IS) 퇴치, 국제보건, 핵확산 방지,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초국경안보 현안에도 신속 대처해 나갈 것으로 예상

[한·러관계 전망]

- 2015년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모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부문에 걸쳐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등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
-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 이에 따른 서방측의 對러 제재에의 동참 여부, THAAD의 배치, 러·북관계 긴밀화 향배 등은 한·러 관계에 긴장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
- 푸틴정부는 남북한 균형 접근의 입장을 지속 견지해 나가면서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한국기업 참여, 남·북·러 3각 경협 현실화 등 경제적 실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북·러관계 전망]

- 푸틴정부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안보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가운데 2014년 급격히 가까워진 러·북관계 상황을 對한, 對미, 對중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또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하에 ‘북핵 불용’의 입장 견지 및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나진~하산 물류사업에의 한국 참여 성사, TSR, TKR 연결, 연해주 농업 사업 등 남·북·러 3각 경협 of 현실화를 위해 對北 접근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이밖에 상호 전략적 이해를 토대로 ‘푸틴-김정은’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러·북관계는 고위급 인사 교류 지속, 문화, 예술, 관광 부문의 활성화 및 양국 간 경협, 무역고 증진도 이룩될 것으로 예상

주요 안보현안 및 이슈별 전망

가.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 수년간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북한의 선제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의 강한 입장으로 교착 상태
- 2015년에는 중국의 주변국 외교 성과 거양, 오바마 행정부의 동유럽과 중동에서의 외교 실패 만회, 북한의 국제사회 인권문제 압박 회피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증대
- ‘한국식 해법과 전략적 인내 對 조건없는 재개’ 간 간극이 존재하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의 긍·부정적 환경이 혼재, 전도 예측이 난망
- 다만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6자회담이 재개되면 남북관계 개선 압력도 증대할 것이며 일·북 관계 정상화 움직임도 빨라져 동북아 안보질서에 상당한 영향 예상

나.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문제

-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반대한 입장에서 북한최고책임자의 ICC제소안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통과 가능성 희박하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전망
-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내에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자료, 증거물, 보고서들을 총괄하는 조사위원회가 부설 조직으로 신설됨에 따라
 - 향후 탈북자 증거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현장 검증 압박, 보고서 채택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통성 등이 강화될 전망
- 따라서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자체 조사가 불가피해졌고, 현장 검증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핵문제로 냉랭한 중국보다는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통한 외교적 고립 탈피 모색 전망
- 그러나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입각해 유엔에서 매년 대북 인권상황에 대한 압박 수위가 확대되고, 유엔 이외의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대북 인권 견제 및 압박도 크게 확대될 전망
 - 따라서 현재 다급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는 인정하지 않고 교화소의 존재는 인정하고 나왔듯이 향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적, 실증적, 학술적 대응 자료들을 조작, 급조해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할 가능성 지대
- 북한 인권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북한 내부 변화, 남북관계, 주변국관계 변화 등 한반도 안보질서 재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

다. 동북아 주요국 합종연횡 향배

- 주요국의 자국 이해중심의 국가 간 합종연횡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핵위협 억지를 위한 한미일 + 중 4국 공조지속 예상
- 북한의 남북자조사위원회 활동 지체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북일 관계 경색 국면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1년 정도의 관리기간을 설정해 양국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지대
- 미·일 동맹관계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증대에 대한 중국의 경계는 미국의 對中 경쟁적 협력관계 내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일 간 경쟁적 대립관계도 실용적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 함유

라. 사드(THAAD) 한국배치 문제

-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안보적 효용을 놓고 국내여론이 분열되어 있고 찬반 대결 국면이 노정되고 있어 단기간에 사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
- 사드배치가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 중국은 사드배치를 놓고 외교적 수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중 교역관계에

약소한 제동을 걸거나 북·중관계 제고를 위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존재

-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북한핵 억지력 강화의 명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할 예정
- 추후 미·중관계 면모와 국내 여론수렴, 대중관계 등 제반 사안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

마.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의 변화

- 미국은 일본이 일정정도 지역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 경제력, 글로벌 비전, 국제적 리더십 등을 갖춘 소위 ‘일등국가’ (Tier-One Nation)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 이런 미국의 희망을 아베정부가 대내외정책에서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일본이 자국헌법을 수정해서 전면적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인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일동맹이 나토동맹처럼 광역화되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만 일본의 군국주의로 인해 과거 고통을 받았던 한국, 중국, 북한, 대만을 제외하고는 동남아국가들 대부분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가 자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강화될 전망

- 한·미·일 대북 핵미사일 군사정보보호약정의 성과에 기초해 3국간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및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등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배제 불가

바. 중국의 신아시아 안전관과 CICA 향배

- 중국이 강조하는 아시아안보의 아시아국가화는 한·미, 미·일동맹에 대한 도전 형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미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지역의 안보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 내포
 - ※ 중국이 주장하는 아시아 신안보론에 대한 협의과정에 18개 CICA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한국만 불참
- CICA 회원국들 다수국가가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현재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CICA 내에서 당분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전망
- 다만 한국, 태국, 인도, 이스라엘 등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고, 읍저버로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과 미국주도의 국제기구들이 정식회원국으로 참여할 경우
 - CICA의 성격이 지역을 벗어나 글로벌 차원의 다자간 협력기구로 발전할 가능성도 내포

- 중국의 미국 영향력 배제 의도로 인해 CICA가 아시아국가 중심의 지역안보 협의체로 발전하는 데는 일정정도 한계 예상
- 미·중 경쟁적 협력관계 연장선내에서 CICA와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위시해, 한·미·일, 미·일·호, 미·일·인도 간의 안보협력 관계도 증대될 전망

사. IS로 인한 중동 안보지형 변화

- 2004년 알카에다 이라크지부로 시작된 이슬람국가(IS)는 2014년 칼리프가 통치하는 이슬람국가로 공식 선언, 2013년부터 시리아로 진출한 이후 현재 시리아, 이라크, 북부아프리카지역을 장악
- 수니파로 구성된 IS는 총선으로 다수시아파가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등과 대치중, IS로 인해 중동정세의 위기 국면 가중
- IS의 민간인 학살과 외국인 인질 참수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EU와 미국으로부터의 공습 강화에 맞서 SNS를 통한 구미 인질 참수 생중계로 맞대응해 IS 내부결속 강화 모색
- 시리아 내전상황, 이란, 터키, 쿠르드민병대와의 복잡한 종파관계, 국제연합군의 군사행동에 대한 아랍의 경계 등이 얽혀 통합된 반 IS 세력 형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대부분 친미 수니파 아랍국가들의 반IS 전선 동조가 크게 확대

- 미국의 미온적 중동정책으로 인해 IS와 같은 테러집단의 확대를 막지 못했다는 미 조야의 비난 강화, 2014년 중간선거 이후 여소야대 상태에서 미 공화당의 파병 촉구는 결국 오바마행정부의 점진적인 중동파병 정책 전환으로 반영될 가능성 지대

자. 초국경 안보의제

-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에서 보듯 전염병, 국제보건,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식량안보, 인간안보, WMD 확산 방지 등 초국경 안보의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전망

2015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가. 동아시아 질서 재건축 움직임에 능동 대응

[역내 세력전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전략 수립]

- 동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미중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의 축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내 세력전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전략을 수립할 필요
- 어느 특정 강국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편승(bandwagon)외교는 갈수록 약효가 떨어질 것이며, 결국은 세력전이의 양상에 적절히 대응하는 ‘양방정책(hedging)’ 또는 ‘사안별 지지(issue based support) 정책’을 수립
- 즉, ‘세력전이론’이나 ‘공격적 현실주의론’ 등이 논하는 바와 같이 미·중간 ‘충돌불가피론’에 근거하여 한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선택과 경사를 추구하는 정책은 최대한 배제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미중관계 속에서 가능한 협력이슈, 중립이슈, 갈등이슈를 정확히 분류·파악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한국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 외교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

[3대 외교정책 로드맵 실천을 통한 성과 제고]

-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외교정책을 성안
 - ※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14.
 - ※ 국립외교원.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 서울: 국립외교원, 2014.
 -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서울: 오름, 2014.
 - ※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서울: 외교부, 2013.
 - ※ 통일연구원.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이제 세부적인 로드맵 구상과 실천을 통한 성과 제고에 주력

[미·중 중심의 균형외교를 넘어서 동북아 전방위 외교 추진]

- 2015년에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 조정, 중국의 주변국 외교 본격화, 일·러의 타개 외교, 북한의 다변화 외교 등 합종연횡식 외교 부각
-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기존의 균형 외교 기조는 유지
- 우리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전면에 내걸고 기존의 미·중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일본,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계

[미·중 양국에 대해서는 통일외교를 본격화]

- 미국은 통일한국의 한·미동맹 잔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최근 한·중관계의 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 것임
-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책무 과시로 THAAD, AIIB, CICA 등 민감한 현안에서의 오해 여지 차단

- 중국은 내부적으로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이 자국의 영향권 내에 포섭되었다고 안도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묵인할 가능성 증대
- 한·중 FTA 체결로 한·중관계가 중국이 강조하는 ‘운명공동체’로 격상되었으므로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부각

[일본의 돌출적 외교 행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아베 내각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의 재신임을 바탕으로 러시아, 북한과의 파격적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 경계
- 한국정부는 무원칙한 일·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통해 일본의 돌출적 행태를 견제할 필요
-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의 선제적 정상화를 통해 일본의 돌출적 행보가 초래할 파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효과적

나. 한·미 전략동맹의 공고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간 상호 충돌 극복]

-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갈등·경쟁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일방을 택하면서 다른 일방과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선택 방지가 바람직

- 미국은 한국의 유일 안보동맹국인 반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상황에서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 여하에 따라 동맹 약화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
-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갈등할 수 있는 이슈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이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원칙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긴요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

- 한·일 양국은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그래서 한·일관계를 단순히 양자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동북아 평화유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도 새롭게 평가할 필요
-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급속한 對中 접근, 한·일관계 악화와 對日 외교 경시, 對북한 정책의 원칙적 접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노출 등의 특성을 표출
 - 한·일관계의 악화가 동북아의 對미, 대중, 대러, 대북한 관계에 주는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균형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움
- 한·일관계는 양국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 구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국익 증진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관리하고 증진시킬 필요

-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세하고, 국익의 공통분모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리 외교를 추구해 나갈 필요
- 따라서 일본의 보수 우경화에 대해서는 역사인식과 방위안보 정책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일본에 대한 관여와 견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

[안보문제에 관한한 중국이 미·일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

-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는 상당히 깊지만, 안보적 이해관계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는 바
 - 한국의 생존과 이해가 걸린 안보문제를 위해 일본과 경색된 관계를 풀고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헌법 개정 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권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본측 동향에 예의주시할 필요성 존재
-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택한 일본에 대항하여 한국이 중국과 안보적 협력을 선택할 수는 없는 실정이며, 안보문제에 관한한 중국이 미·일의 대안이 될 수 없음도 인식할 필요
-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한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對日 견제적 성격을 활용, 유기적인 한·미·일 관계를 유지할 필요

다. 전략적 유연성 발휘하 주도적 대북정책 추진

[주변국과의 대북정책 공조 강화와 주도적 추진]

- 주변국과의 대북정책 공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선도적 의지와 능력을 발휘
-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주력하는 한편, 미·중 양국과 조율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지속

[북한의 대남 도발 사전 제어 및 개혁·개방 유도 적극화]

- 기존의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기본 틀을 견지한 가운데 향후 김정은 체제의 업적 과시 및 대내 체제 안정을 위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사전 차단, 제어
- 남북 간 신뢰 축적 및 작고 실현 가능한 부문부터 선차적, 점증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중·러 국제경협 활성화 등 국제규율 준수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정상국가로의 변화 추진

[인류 보편적 원칙하에 대북 인권정책 견지]

- 북한 인권문제 접근에 있어 인류 보편적 가치 지향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탈북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 지속 견지 및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 유관 매뉴얼 재정비 및 사전 대비책 강구 긴요

라. 한중, 한일, 한러 양자관계 증진 및 현안 해결 진력

(1) 한중관계 관련

[시진핑 지도부의 주변국외교 철학을 적극 활용]

-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국외교를 어느 때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주변공작좌담회’를 통해 ‘親, 誠, 惠, 容’으로 대표되는 주변국외교 방침을 천명
- 이는 “주변국과 더욱 가깝게 지내고(親), 성심과 성의를 다해 주변국을 대하며(誠), 중국의 발전과 함께 그 기회와 혜택을 나누고(惠), 주변국을 더욱 포용하며(容)” 나아간다는 의미
- 우리의 핵심이익과 안보사안이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중국의 주변외교 철학을 적극 활용하여 한중 양자관계를 발전시키고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對韓 접근을 활용해 나갈 필요

[중국의 對韓 접근을 활용한 북한 변화 견인]

- 박근혜 정부와 시진핑 체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통인식을 지니고 있는바, 중국의 적극적 對韓 접근을 활용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데 활용
-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 지도부에게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하거나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

- 나아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을 견인하기 위해 ‘개성공단 국제화’에 중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중 접경지역 개발 및 북한내 인프라 건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에 중국의 협조와 공동 참여를 유도

[한국 주도 ‘소규모 다자주의’ 적극 활용]

- 오늘날 국제관계는 복합네트워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바, 중국의 對韓 접근에 매몰되기보다는 동아시아 주요국들 간의 다자 공조체제를 적극 주도함으로써 외교적 운신의 폭을 확대해 나갈 필요
- 일단 현재 공전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개최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 중재역할을 담당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중·일 3국간 고위급 전략대화’의 개설과 정례화를 추진
- 만일 한·중·일 3국을 포괄하는 정부간 대화가 어렵다면 한·중·일 3국의 ‘국책기관 전략대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갈등 당사국들 간 최소한의 소통의 장을 주도할 필요
- 나아가 동아시아를 벗어난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과 어깨를 견주는 ‘중견국(middle power) 외교’를 활성화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주도의 G2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외교무대의 창출을 시도할 필요

(2) 한일관계 관련

[역내 현안의 '현상유지' 원칙과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

- 중·일 관계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대치 속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미·일 동맹의 우위 속에서 급격한 현상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력상승에 따라 중·일 힘의 역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아베 총리는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아베 독트린'을 발표하며, 미·일 협력에 의한 자유항해권과 자유비행권의 보장을 주장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
- 중국과 일본이 양국현안에 대한 '4대원칙'에 합의, 중·일 제3차 전문가조직의 협상을 거쳐 해상연락메커니즘이 가동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일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될지 여부에 양국관계가 좌우
 - 중·일 정상이 회동한지 3주만에 센카쿠열도 주변에 중국 해양경찰 순시선이 진입하고 이에 맞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출동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
-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은 향후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상유지' 원칙에 따른 독도의 분쟁방지화 필요
 - 정부의 KADIZ 확대 선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항공기가 이를 무시한 채 통과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등 실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상변경'시도는 강대국에게 역이용 소지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 추진]

- 한·중·일이 외무장관회담의 개최에 공감을 표시했음에도 아직 열리지 못하는 등 완전히 갈등관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국 외무장관회담이 개최한 뒤 이것을 토대로 하여 한·중·일 정상회의를 2015년 상반기가 넘지 않은 시기에 서울 개최를 추진
 -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재난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3개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했으나 2012년 4월 이후 중단
- 최근 APEC, EAS, G20 계기 일본의 對中 및 對韓 대화공세에도 불구하고, 아베 일본 총리의 기본자세가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조기총선 실시에 따른 국내정치용으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처 필요
 - APEC 계기로 중·일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섬) 문제에 대한 '4개 원칙'에 합의한 것처럼, 향후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중 공조에 기초해 과거사문제에 대한 접근원칙의 확립이 중요
- 과거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태도는 국제공조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되, '균형외교' 원칙에 따라서 한·중관계 발전과 더불어 한·일관계의 '작은 통로'를 확보하려는 지속적인 외교노력이 필요
 -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 공조를 위해 한·중 전략적 공조의 강화는 필요하나, 과도한 한·일 양국의 대립·반목은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일 뿐 아니라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과도하게 용인하는 부작용 야기

[비례성 원칙에 따른 한·중, 한·일 군사협력의 병행 추진]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향후 한·미·일 대북 핵미사일 군사정보보호약정에 이어 3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BMD협력 등 3국 군사협력네트워크가 계속 추진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
 -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중국이 자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
- 일본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우려와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해, 그 동안 한·일 군사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비례성원칙에 따라 한·중 군사협력과 한·일 군사협력을 동시 추진
 - 한·미·일 대북 핵미사일 군사정보보호약정이 순수한 대북정보의 공유 차원에 국한된 것처럼, 중국측이 동의한다면 비례성 원칙에 따라 중국과도 대북 핵미사일 군사정보보호약정 체결 추진 검토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안보분야로의 확대 추진]

- 한·중·일 정상회담의 재개를 계기로, 침체되어 있던 동북아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본격적으로 착수
 - 한·중·일 협력관계의 복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외정책의 중점 과제로 추진중인 동북아평화협력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효성 확보 위해 비군사분야를 넘어 비례성 및 무해성의 두 원칙에 따라 한·중 및 한·일의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부터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점차 한·중·일 3국 공동협력으로 발전
 - 동북아국가들끼리 특정국가 겨냥한 군사협력하지 않는다는 무해성 원칙 아래, 해상 수색구조 활동과 같이 낮은 수준에서 재난지원 및 해상교통로 공동보호 등 점차 높은 수준의 3국 공동안보체제 모색
- 한·일 간의 군 인사교류, 함정의 상호 교환방문 등 신뢰구축을 넘어 한·중·일 3국의 제주도 남쪽해상 및 동중국해 등에서의 해상 구난 공동훈련 실시를 협의
 - 역내 공동훈련은 동해상의 해상구난훈련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보다 가급적 한·중·일 3국의 공동훈련으로 추진

(3) 한러관계 관련

[한러수교 25주년 행사 및 한·러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 2015년은 한러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로 한·러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를 내실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2010년 한·러 수교 20주년시 치러진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2013년 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박근혜-푸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

※ 2014년 북러관계 진전과 더불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푸틴과 면담하고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특사로 방러(11.17~24), 향후 북·러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유의

[한·러 간 1.5 트랙 전략대화 복원 및 고위급 인사 교류 증대]

- 크렘린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와 인맥 중심의 러시아적 특성을 고려, 한국의 NSC와 러시아의 국가안보회의 인사가 참여하고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1.5 트랙의 전략대화 복원이 긴요
- 또한 양국간 올바른 이미지 제고 및 상호 이해를 위해 언론인 등 여론주도층의 상호 방문, 초빙 외교의 전개가 필요

[남·북·러 3각 경험 성공사례 창출]

- 한·러관계 발전을 위해 수사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 경험 실천의 모습 창출이 긴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모습 및 성공 사례로서 ‘나진~하산 물류 교통사업’의 성공적 추진 긴요
- 이밖에 아무르주 지역에서의 농업, TSR, TKR 연결, 전력망 구축 사업 등 남북러 경험의 성사 추진

[GTI 등 소지역 다자협력의 활성화 도모]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제15차 총회가 중국 연길에서 개최(9월)된 가운데 2016년까지 동북아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

- 또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은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를 창립하는 등 소지역 국제경협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
- 이는 남·북·러 3각경협에 협력 분위기를 제공하고 북·중·러 접경 개발에 따른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효과를 내포, 향후 이의 추진에 관심 제고 및 적극 지원이 바람직

[유라시아 네트워크 심포지엄 성공적 개최]

- 2014년 ASEM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UNESACP 등 국제기구,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정부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해 유라시아 연계 협력증진 방안과 우선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구성
-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심포지엄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세부 실천과 관련 성공적 개최에 만전.

마. 경제안보 강화 및 국제경제 재편에의 사전 조응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불확실성을 완화]

- 한국경제는 내년도에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 보다 다소 높은 3.7%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美금리인상 관련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경우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전망
- 2015년 국내 경기는 미국 출구전략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안전성이 확대될 경우 소비 회복 지연 가능성 존재

- 특히 하반기 美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금리 상승세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사전에 명확히 경제 주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금리 부담 압박이 급작스럽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과열 방지책 동시 추진]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금융자산 가치 위축으로 인한 민간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해야 하나, 동시에 부동산시장 과열이나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 등 유연한 정책 대응 필요

[對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

- 중국이 중간재 수출 국가에서 최종 소비재 국가로 전환과정에 있는 만큼 對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에 대비, 중간재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뿐 아니라 對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

[주요국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미국의 금리 인상, 유로존 위험 재부각 등 대외충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 대외부문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각국 정책 대응 차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불확실한바, 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외화유동성 확보 및 국내 자금 유출에 유의]

-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초를 유지해 외화 유동성을 적정 관리
- 특히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신흥국 자금 이탈로 인해 개발도상국 경제에 위기감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예상되므로 자본 유출입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

바. 중견국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기여·공공외교 강화

[중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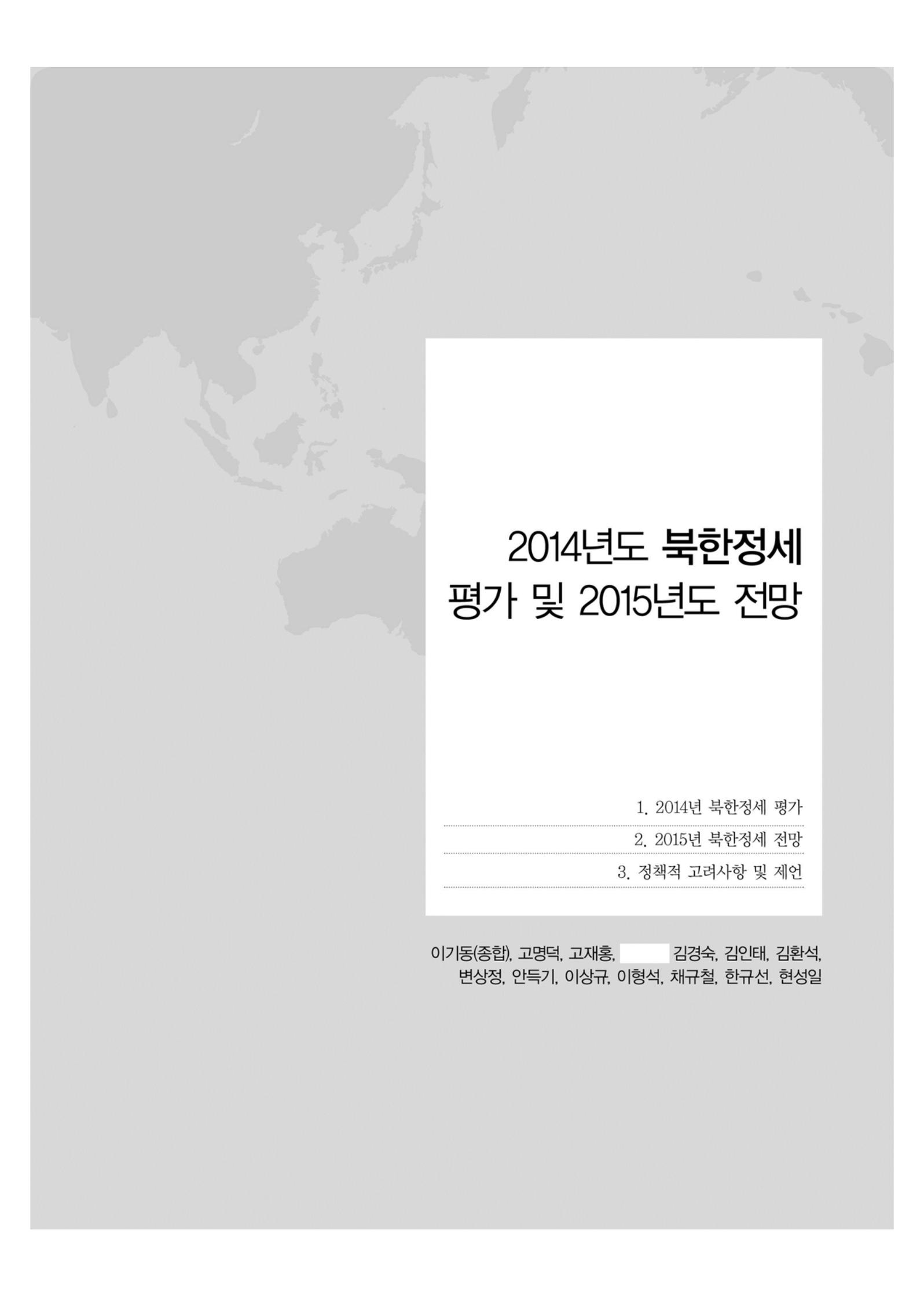
- 2015년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할 예정인 바, 중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 강화
- 국제기구 진출 및 유치 확대, 다자회의에서의 외교 역량 발휘, 한국형 개발원조 및 KSP 확대로 긍정적 국가 이미지 제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공헌외교 전개]

- 유엔평화유지군(이하 PKO) 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 평화·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 지속 수행
- 유엔 분담금이나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기여도를 한국의 비중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에볼라, 국제테러, 기후변화 등 초국경안보 의제에의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

[문화산업 육성·지원 및 공공외교 확대]

- 한류, K-Pop 등 문화콘텐츠를 문화산업으로 육성·지원해 문화 수출 강국으로 도약 및 공공외교의 확대



2014년도 북한정세 평가 및 2015년도 전망

1. 2014년 북한정세 평가

2. 2015년 북한정세 전망

3. 정책적 고려사항 및 제언

이기동(종합), 고명덕, 고재홍, 김경숙, 김인태, 김환석,
변상정, 안득기, 이상규, 이형석, 채규철, 한규선, 현성일

요 약

I. 2014년 북한정세 평가

1. 북한 내부정세 평가

- 2014년 북한은 정치적으로 장성택 여독청산 등 숙청사업을 지속적으로 단행하면서 김정은 친정체제 구축에 박차
- 이러한 공포 분위기 확산은 외형상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강화로 비쳐지는 가운데 권력층의 불안과 동요 및 체제 효율성 감소를 야기
- 군사적으로 군사력 과시와 더불어 군대의 경제건설 투입 증대 등 군의 역할 제고를 통한 김정은 유일명령체계 강화에 주력
- 동시에 실전대비능력 향상 및 부대전투력 강화, 그리고 군기강 확립에 매진하고 대남 비대칭 전력 증강을 지속
- 경제적으로 식량조달의 호전과 이에 따른 곡물가격과 환율이 다소 안정 기미를 보였으나 계층간·지역간 생활 격차는 심화
- 시장화 확대 추세 속에서 개인 수송수단 등 자생적 경제행위, 비공식적 노동시장이 출현하고 신흥부유층이 증대

- 대중 무역 감소 및 교역구조 약화와 함께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에 따른 국제적 고립으로 대외부문이 위축되고 외화난이 가중
- 사회문화적으로 문화건설분야에 치중하고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독려함으로써 김정은 업적쌓기와 대내결속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 사회에 ‘체육열풍’ 확산을 촉구
- 과학자와 교육자를 특별히 우대하면서 지식경제강국 건설과 경제발전을 추동할 과학기술중시와 인재중시노선을 추구

2. 남북관계 평가

- 북한은 연초부터 정치·군사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저장도 대남 도발을 지속하는 등 대화와 도발의 이중전략을 구사
- 핵심 실세 3인의 인천방문 전격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시도
- 한국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등 5. 24 대북조치의 유연한 적용과 대화를 통한 5.24 조치 해결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
- 경제협력 내용을 담은 대북 제의를 지속하였으나 북한은 흡수통일론 시비로 반응
- 정치·군사적 부문과 달리 인도적 지원사업과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양상을 시현

3. 대외관계 평가

- 대중관계는 정치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중 의존도를 줄이면서 러·일 등을 대상으로 외교다변화전략을 추진
- 중국과의 소원관계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고고도미사일 배치문제 등 현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중국과의 공조관계를 유지
- 대미관계는 미국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등 핵 위협을 지속하는 동시에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대화 분위기 조성을 시도
- 억류자 무조건 석방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우회하는 동시에 유엔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정면 대응
- 대일관계는 납치자문제 해결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 스톡홀름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이견을 노정
-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등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관계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

II. 2015년 북한정세 전망

1. 내부정세 전망

- 북한은 2015년에도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 작업에 주력하는 가운데 美 소니사 제작 영화 「인터뷰」의 북한 침투와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대응, 전체 주민의 사상재무장을 적극 독려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건재를 과시하는 한편, 행사를 앞두고 대규모 노력동원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 가중과 김정은의 ‘무력통일론’을 둘러싼 군부내 충성경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
- 아울러 북한군의 취약점 보강 및 한국군의 군사방어능력 대응 차원에서 기습·선제·침투공격을 위주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비대칭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
- 또한 김정은의 유일명령체계 공고화를 넘어 장기집권 기반 조성 차원에서 군에 대한 대규모 위무성 행사를 계속 개최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국방력 강화와 인민경제 향상을 중점과제로 제시하면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당국의 통제는 느슨해 질 것이나 생산구조의 문제로 지속적 경제 성장에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경제개혁 조치는 정치·사회적 파급영향을 감안하면서 현재의 패턴을 유지하는 가운데 조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대중 무역의존도 탈피 및 교역선 다변화 차원에서 경협 및 교역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나 핵·경제 병진노선을 비롯한 체제유지 위주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소기의 성과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당 창건 70주년 계기 <아리랑> 공연, 대규모 체전 개최 및 군사 퍼레이드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경축 분위기를 조성, 김정은 치적 과시와 내부결속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가운데 김정은 치적쌓기의 일환으로 대규모 전시성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

2. 남북관계 전망

- 북한은 2015년 신년사에서 남북대화 등 최후통첩성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비방중상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연초부터 남북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전단 살포 및 군사훈련을 빌미로 저강도 도발을 감행,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서해 서남전선군사령부(NLL 관할)의 공개적인 도발위협 증가 추세를 유추할 때, 서해에서의 군사적 도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정부가 재량권에 의거, 5.24 조치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경우 북한은 5.24 조치의 사문화 유도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추진 방침에 호응할 것이나 이산가족문제는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개입 수준과 연동시킬 것으로 전망

3. 대외관계 전망

- 북한은 국제적 인권압박에 위기감을 느끼고 핵개발의 정당성 논리 및 핵실험 위협으로 대응하는 등 핵·인권 압박에 적극 대처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중국지도부의 당 창건 기념식 대거 참석을 기대,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 흐름을 이용하여 정상회담 개최 등 대중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
- 對 일·러 관계 개선 및 증진에 주력하면서 대미 접근을 타진하는 등 일종의 헛징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중국 견인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및 ‘맞춤형 억제전략’에 4차 핵실험 업포 등 핵능력 고도화 위협으로 맞설 것이므로 관계개선의 실마리 찾기 난망시
- 미국이 북핵 능력 고도화 차단 목표 하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완화시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 마련 여지 존재
- 김정일에 비해 납치 책임이 덜한 김정은은 스톡홀름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납치자문제 해결에서 다소 진전이 있더라도 북핵문제를 비롯한 주변 정세 때문에 단기간 내 정상회담 개최나 국교정상화 실현은 난망시
- 최룡해 방러를 계기로 내년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관계는 新밀월기를 맞을 뿐 아니라 동북아 외교판도에도 변화가 예상

- 그러나 북·러 정상회담은 북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일정한 태도변화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관망이 필요하며, 북·러관계 긴밀화가 북·중관계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

Ⅲ. 정책적 고려사항 및 제언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지]

- 북한의 군사 도발시 강력한 응징조치가 수반될 것이라는 선언적 억지와 더불어 대비태세 강화를 통한 실천적 억지력 과시
- 북한의 무모한 군사 도발은 한반도에서의 안보딜레마를 가중,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을 궁지로 모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무력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억지’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

[북한의 경제특구 활용]

- 나선특구 등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주력하는 경제특구들 중 접근이 용이한 특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
- 국제기구,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요 대북 루트를 확보한 국가들과 북한 진출을 목표로 한 경제협력을 강화

[선 남북관계, 후 미·북관계 구도 형성]

- 미국이 북핵 능력 고도화 차단 목표 하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완화시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 마련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이 소외당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미공조를 유지
-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미·북관계 개선이 용이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남북경협 연계 추진]

- 남북한 육상운송망 연결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필수적이므로 남북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병행하여 성사시키는 것이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향후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추진동력으로 삼고 북한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틀로 견인하는 시범사업으로 활용

[광복 70주년 계기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

- 갈등요소가 적은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신뢰의 단초를 마련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차원에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적극 추진

2014년 북한정세 평가

1. 북한 내부정세 평가

가. 정치분야

[장성택 여독청산사업을 비롯한 지속적 숙청 단행]

-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와 유일영도체계 확립, 당의 통일단결과 순결성 보장 등을 주요 정치적 과제로 제시
- 이의 일환으로 장성택 여독청산을 비롯한 숙청사업을 계속 단행
 - 장성택과 연계하여 중앙 및 지방당 간부 수십명 총살

[친정체제 구축 박차]

- 장성택 숙청 등에 따른 권력구조 정비와 친정체제 구축에 주력
 - 제13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와 제1, 2차회의, 당 정치국 회의와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등을 통해 인사·조직 개편 단행
 - 이 과정에서 최룡해 등 ‘빨치산혈통’과 황병서 등 고영희 측근인물, 조직지도부 등 장성택 숙청 주도세력이 친위세력으로 부상
 - 반면, 김경희와 김영일, 문경덕, 리영수, 백계룡 등 장성택 계열 인사들이 대부분 실각·숙청

- 각 종 정치행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개최, 체제 결속과 충성심 고취를 통한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 기반 공고화에 매진
 - ※ 제8차 당사상일꾼대회와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노농적위군지휘성원 열성자회의(2월), 제1차 비행사대회(4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5월), 제13차 전국교육일꾼대회와 제4차 청년동맹초급일꾼대회(9월), 제3차 인민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11월) 등 소집

[권력층의 불안과 동요 증가]

- 권력층의 빈번한 서열 변동과 인사교체 및 계급강등을 통한 길들이기는 권력층의 불안과 동요, 체제수호 의지의 약화 등을 초래
 -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최룡해에서 황병서로, 인민무력부장을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교체
 - 공개보도 호명 순서에 따른 권력 서열도 최룡해 → 황병서 → 최룡해로, 군 서열도 인민무력부장(장정남) → 총참모장(리영길) → 인민무력부장(현영철) 식으로 널뛰기
 - 각 군종 지휘관 사격경기, 공군지휘관 ‘전투비행술경기대회’, 해군지휘관 수영훈련 등에서 군 간부들에 대한 ‘얼차려식’ 군기잡기 실시

[김정은의 발목이상을 충성심 유도 소재 활용]

- 북한은 김정일의 발목질환을 은폐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하는 등 최고지도자의 신변문제를 비상사안으로 간주
- 이와 달리 김정은의 경우 ‘헌신적인 지도자상’ 선전을 통한 충성심 유도 및 통치력에 대한 자신감 과시 차원에서 불편한 모습을 공개

나. 군사분야

[북한군의 군사능력 과시 및 역할 제고]

- 북한군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무력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군사훈련 공개 및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능력을 과시
 - 아울러 북한군은 김정은의 인민생활 향상을 명분으로 한 전시성 경제건설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위성과학자거리, 국제소년단야영소, 각종 유희오락시설을 비롯한 주요 대상건설 등 경제적 역할 확대
- ※ 북한군 267 건설부대의 역할에 주목

[김정은의 군에 대한 유일명령체계 강화 주력]

-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황병서와 현영철 등을 군 수뇌부에 배치함으로써 군대내 김정은 친정체제를 강화
 - ‘노동적위군지휘성원열성자대회’,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제1회 비행사대회’ 등을 개최, 사기 진작 및 충성심을 고취
 - ‘군종·군단급 지휘성원 사격경기대회’, ‘해군지휘관수영경기대회’ 등에서 김정은의 군 고위층에 대한 장악력을 시현
 - 수차례의 로켓·미사일 발사훈련 등 각종 군사훈련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지도, 김정은 유일군사지휘체계를 과시

[실전대비능력 향상 및 부대전투력 강화와 군기강 확립 매진]

- 로켓·미사일 기습발사 훈련, 항공육전병 야간 훈련, 육·해·공 삼상륙합동 훈련, 육전병 타격 대상공격 훈련, 도로이용 비행 이착륙 훈련 등을 실시

- 전군 사격훈련, 전투비행술 및 수영 훈련, 잠수함 훈련, 각종 포격 훈련, 섬초소 방어대의 포격 훈련 등을 실시, 전투력 강화와 군 기강을 확립

[대남 비대칭 전력 증강 지속]

-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실시’ 엄포를 비롯, 한국의 군사방어 체계에 대응한 무인기 위협 등 다양한 무력위협을 시위
- 다종·다양의 미사일 개발 및 신형 방사포의 사거리 연장과 정밀도 향상, 신형 전술유도탄 개발과 잠수함 건조에 주력

다. 경제분야

[‘먹는 문제’를 비롯한 경제사정 다소 호전]

- 장마당 경제의 확대 영향으로 제한적이거나 저성장세를 지속
 - 설비투자, 에너지 등 주요 생산요소의 공급부족 현상이 여전하고 농업 및 광업 생산 증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성장은 제한적 수준
- 식량 증산 및 곡물거래의 완화에 힘입어 곡물가격 및 환율이 물가안정을 견인
 -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물가와 환율이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세를 유지
 - ※ 2013년 초반 쌀은 kg당 6,600원 수준이었으나, 2014년 중반 이후 kg당 4,000~4,300원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환율 역시 2013년 초반 8,990원 수준에서 2014년 중반 7,100으로 하락

- 농업투자 증가, 기상여건 양호, 농업개혁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식량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계층간·지역간 격차는 심화

[시장화 확대 추세 속에서 자생적 경제행위와 신흥부유층 출현]

- 계획에 의한 인위적 분배는 감소하고 시장에 의한 거래적 분배는 증가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
 - 북한당국의 시장활용 정책과 시장가격의 안정, 유통수단 발달 등에 힘입어 시장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
- 전력난 등 열악한 경제인프라 여건 속에서 새로운 자생적 경제 행위들이 출현
 - 전력난으로 인한 열차수송의 어려움으로 지역 거점도시 중심의 개인 수송수단(서비스차 등) 확산에 따라 새로운 시장교통망이 형성
 - 소비재 중심의 시장활동을 벗어나 공장·기업소간 자재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자교류시장’(생산재 시장)이 기능하기 시작
 - 경제개혁 조치에 따라 잉여 노동력 해고, 숙련 노동력의 선별적 사용 등 재량권을 행사하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이 형성
-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신흥부유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공급의 부족으로 유통물품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
 - 휴대폰 매매업, 대부업, 부동산 사업 등 고수익을 올리는 20·30대 신흥부유층이 형성
 - 평양을 중심으로 외국상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새로운 상품 진입이 지속

[대중 무역 감소 등 대외경제 부문의 악화]

-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무역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대중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
 - 5.24 조치 이후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외화획득과 물자조달을 하였으나, 금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성장세는 감소 또는 답보
 - ※ 2014년 상반기 무역적자 19% 증가(中 해관통계 발표기준)
 - 지하자원의 수출단가 하락, 중국의 경기둔화,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김정은 치적사업용 투입재 수입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대중국 수출 확대를 견인한 무연탄과 같은 전략물자의 수출 가격이 2013년 대비 20~30% 하락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3년을 기점으로 둔화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효과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계속 상승한 반면, 중국의 대북 투자 유치 부진으로 교역구조도 악화
-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제재의 심화 및 외자유치 부진 등으로 대외부문이 위축되고 외화난이 가중
 - 중앙특구와 지방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으로 외자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대외 신용도 부족·취약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성과는 별무

[당국의 경제정책 성과 한계]

- 북한은 금년 신년사에서 밝힌 ‘김정은식 실용주의’ — 농업·경공업분야에 대한 자원 집중과 효율적 중화학공업 운용 — 중심의 경제정책을 운영
 - 만성적인 에너지난, 생산요소 부족, 군수경제 편중 등 투입재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생산성 향상 효과는 제한적 수준

- 지적 과시용 건설 확대, 군사력 및 대량살상무기 증강을 위한 인프라 유지, 특권층 생활 보장 등 기존의 한계를 지속
 - 정치·군사적 대외강경책에 따른 외화수입 환경의 악화로 외화난이 심화되자 외화수입 통로의 다변화를 시도
- 외화벌이 중심의 대외정책과 핵·경제 병진노선의 영향으로 생산요소 감소 및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 북한경제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

라. 사회문화분야

[애민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노선과 대내결속 도모]

- 올해 북한은 주민들에게 가시적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을 비롯한 문화건설분야에 치중
 -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책순서를 지난해 ‘경제-국방-사회문화-사상’과 달리 ‘경제-사회문화-국방-사상’ 순으로 나열
 - 금년 신년사에서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표방하고 이 분야에서 김정은의 업적 쌓기에 주력
 - 각종 대형 건설사업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발전상을 부각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켜 충성심을 유도
- ※ 지난 해 말 마식령스키장을 완공한 데 이어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 김책종합공업대학 교육자아파트, 평양육아원·애육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게소, 지열난방시스템의 ‘녹색건축물’, 체육시설과 놀이시설 등을 갖춘 ‘다용도·다기능화’ 건물을 김정은의 ‘인민 사랑의 결정체’로 선전

[체육 열풍 분위기 조성을 통한 강성국가 이미지 보완]

- 북한은 당의 ‘체육 대중화 방침’에 의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체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 사회에 대중체육 열풍 확산을 촉구
- 인천 아시안게임 종합순위 10위권 복귀와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을 대중체육 열풍의 계기로 적극 활용
 -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육행사를 연이어 개최
- 김정은정권의 체육대중화정책은 김정일의 영화예술 대중화정책과 방식은 다르지만 취지는 동일
 - ‘3S 愚民정책’의 일환으로 체육(스포츠)을 통해 주민들을 탈정치화시키고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

[과학기술 중시 및 인재 중시 노선]

- 북한은 과학자와 교육자를 각별히 우대하면서 지식경제강국 건설과 경제발전을 추동할 과학기술중시와 인재중시정책에 역점
 - 위성과학자들을 위해 아파트, 학교, 병원, 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복합 주거단지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건설
-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김정은체제의 과학·교육 중시정책의 당위성을 강조
 - 우수인재와 지능 개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바둑게임을 개발하는 등 바둑 대중화에 주력

- 아울러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
-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스위스 취리히 응용과학대학에 유학생을 파견

〈표 1〉 2014년 북한 내부정세 평가

구분	주요 내용
정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택 여독청산사업을 비롯한 지속적 숙청 단행 ○ 친정체제 구축 박차 ○ 권력층의 불안과 동요 ○ 김정은의 발목질환을 충성심 유도 소재로 활용
군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의 군사능력 과시 및 역할 제고 ○ 김정은의 군에 대한 유일명령체계 강화 주력 ○ 실전대비능력 향상 및 부대전투력 강화와 군기강 확립 매진 ○ 대남 비대칭 전력 증강 지속
경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 문제’를 비롯한 경제사정 다소 호전 ○ 시장화 확대 추세 속에서 자생적 경제행위와 신흥부유층 출현 ○ 대중 무역 감소 등 대외경제 부문의 악화 ○ 당국의 경제정책 성과 한계
사회문화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민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노선을 통한 대내결속 도모 ○ 과학기술 중시 및 인재 중시 노선

2. 남북관계 평가

가. 정치군사분야

[북한의 이율배반적 태도 시현]

- 북한은 격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차원에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노력 의지를 표명
 - 남북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외교다변화전략의 일환으로 주변국들과의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도 강조
-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2차 고위급회담 제의에 대해 전단 살포를 위시한 비방중상 중단을 전제조건화하면서 사실상 거부
 - 북한은 핵심 실세 3인의 인천방문시 약속한 2차 고위급회담을 전단 살포를 빌미로 사실상 무산 처리

□ 선난후이(先難後易)식 접근을 통한 남북관계의 포괄적 개선 시도

- 북한은 ‘쉬운 것부터 하나씩’이라는 남측의 벽돌쌓기식 접근방법에 대한 경험적 회의감에 기초하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
-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에서의 정치·군사적 장애물 제거를 목표로 한미연합훈련 중지·대북 전단살포 금지에 총력 경주

[북한의 대화와 도발 이중전략 구사]

- 북한은 연초부터 정치·군사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저강도 대남 도발을 지속하는 이중전략을 구사

- 북한은 1차 고위급접촉과 이산가족상봉에 응하고 핵심 실세 3인의 인천 방문을 추진하면서 전단살포 중지와 군사훈련중지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
- 동시에 로켓·탄도미사일 발사훈련, 무인기 침투, 서해 NLL 인근해상에서 포사격 훈련과 한국함정에 대한 포격 도발, 대북전단풍선에 대한 고사포사격, MDL 정찰활동 강화 등 저강도 도발을 지속

나. 경제분야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

- 정부는 5.24 조치 하에 인도적 지원 차원의 민간단체 방북 허용과 함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
 - 특히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된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
 - ※ 현대상선, 포스코, 코레일 등 국내 3개 기업 컨소시엄은 북한의 나선특별시 나진항에서 경북 포항항으로 러시아산 석탄 3만5,000t을 실어오는 시범운송 사업에 착수(11.24)
- 정부는 2차 고위급접촉 재개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
 -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계기마다 전단지 살포를 시비

[경제협력 내용을 담은 대북 제의 지속과 북한의 비난]

- 박근혜 대통령은 2014. 3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히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
 - 이에 대해 북한은 4.12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흡수통일 논리’이자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실상 거부
 - ※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경제개발협력 (남한: 교통, 통신, 건설 투자, 북한: 지하자원 개발 허용)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사업을 제시

- 박근혜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환경, 민생, 문화 분야의 교류 통로를 열어 나갈 것을 제안
 - 이에 대해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주장
 - ※ 특히 민생 분야에서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협력 본격 시작, 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 공유 및 새로운 성장모델(북한 지하자원, 노동력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 등)을 제시

다.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구분하여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
 - 2014년 9월 현재 총 109억 원 정도의 인도적 지원 중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67억, 민간차원의 지원은 42억 정도의 규모
 -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지원과 민간단체의 취약계층 대상 분유,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지속

- 정부는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월드비전의 대북 농업 지원을 승인 (6.4)하는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업물자 및 영농사업을 지원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 추진]

- 금년 2월 이산가족상봉 행사 성사
 - 1회차(2.20~22)에서는 우리측 이산가족 82명이 북측 가족 178명을 상봉하고, 2회차(2.23~25)에서는 북측 이산가족 88명이 우리측 가족 357명을 상봉
-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및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사업 승인 및 진행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7.29~8.6, 中 선양), 천도교·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 개최(10.3),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개최 평양 방북(10.30~11.18, 평양) 등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천 아시안게임 北 선수단 참가 경비 중 5억 5천여만원 지원 결정(10.16) 및 인천 아시안게임 북측 선수단 참가

〈표 2〉 2014년 남북관계 평가

구분	주요 내용
정치군사분야	○ 북한의 이율배반적 태도 시현 ○ 북한의 대화와 도발 이중전략 구사
경제분야	○ 5.24 조치의 유연한 적용 ○ 경제협력 내용을 담은 대북 제의 지속과 북한의 비난
사회문화 및 인도적 지원분야	○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 추진

3. 대외관계 평가

가. 대중관계

[對中 政冷관계 유지]

- 북한은 김정은체제의 안정을 위해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강화를 희망하였으나 중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
 - 중국은 대북제재 조치 이행, 북·중 정상회담에 앞선 한·중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북한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태도를 시현
 - 북한은 공식매체에서 ‘대국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중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
- 이에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러시아와 일본 등을 대상으로 외교 다변화 전략을 추진
 - 북한은 최룡해 특사의 방러를 통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 대일 관계 개선 행보,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외교를 통해 다변화를 모색
- 결과적으로 올해 양국 관계는 고위급 인사 교류 부진, 황금평·위화도 개발사업 담보로 시현

[선별적 현안 공조]

- 북한은 자신의 무조건적 6자회담 개최와 한·미·일의 사전조치 이행 사이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전조치의 문턱을 낮추길 기대
- 아울러 한국에 대한 고고도미사일 배치와 관련, 중국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이용, 고고도미사일 배치를 막기 위한 역할을 분담

- 북한은 고고도미사일을 배치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수차례 감행

나. 대미관계

[핵 위협과 대화 탐색의 이중전술]

- 북한은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핵선제타격 전략’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명분으로 ‘핵무기 보유’ 논리를 정당화
 - 북한은 미국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핵공격’ 등 강경한 어조로 위협
 - ※ “핵항공모함, 핵무기로 위협하면 백악관, 펜타곤, 군기지, 대도시에 핵공격할 것”(7.27 육·해·공·전략군 결의대회)
- 하반기 들어 북한은 대미 대화 재개를 위해 억류 미국인 전격 석방 등 대화 분위기 조성을 시도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는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미·북 경색관계를 돌파하려는 의도도 내포
 - 아울러 북한은 억류 미국인 파울을 시작으로 하여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나머지 두 명의 억류자들도 석방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정면 대응]

- 북한은 억류자 무조건 석방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우회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정면 대응

- 북한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자체 인권보고서를 작성·배포하고 유엔에서 인권설명회를 개최
- ※ 인권결의안 대응 차원에서 강석주 국제담당비서의 유럽 순방,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총회 참석 및 인권설명회 개최 등

다. 대일관계

[납치자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 태도와 합의 도출]

- 올해는 북일 정상회담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이 납치자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정부간 협상을 재개
 - 북한은 대일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고립 돌파와 국면전환을 시도
 - ※ 북한과 일본은 연초 적십자 회담(3월 3일, 중국 선양) 개최, 이지마 특사의 방북, 5월 국장급 회담(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합의’, 7월 납치 피해자 조사 개시
- 북·일은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 개시와 재조사 시작 단계부터 대북 독자제재 일부 해제 및 대북지원 재개 내용의 스톡홀름 합의(5.29)를 도출
 - 납치자문제뿐만 아니라 행방불명자, 유골송환, 일본인 배우자 등 ‘모든 일본인에 관한 문제’로 확장
 -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자문제의 분리 대응으로 선회

[북·일 모두 개별적 이익 충족]

- 북한은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탈피, 일본은 아베정부 임기내 납치자문제 해결이라는 이해관계를 공유

-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 비등에 따른 인기 만회, 대북 접근을 통한 한국 자극 및 한·중 관계 이간 의도
- 북한은 만경봉호 입항재개와 조총련 본부건물 매각문제 해결을 겨냥하였고 매각결정 중지판결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

[스톡홀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이견 노정]

-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일본은 독자적 경제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
 - 일본은 인적 왕래 규제, 일정 금액 대북 송금 보고 의무화, 선박 입항 금지 등을 해제
 - ※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양국 간 인적 왕래(북한 여행포함), 10만엔 이상의 현금 반출 및 30만엔 이상의 대북 송금을 허용
- 북·일은 납치자 조사 내용과 대북 제재 추가해제와 관련 견해 차이를 노정
 - 북한은 10월 예정된 납치피해자 1차 조사결과 통보를 지연시키는 가운데 유엔에서 납치자문제는 기 해결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
 - ※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유엔에서 열린 인권설명회(10.7)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된 사안이고 일본이야말로 북일 합의를 이행하라고 주장
 - 북한은 납치자문제 관련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 재개를 무조건 요구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재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
 - ※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 가능성이 있는 일본인 실종자 수는 지난 5월 말 860 명에서 현재 883 명으로 증가(미국의 소리, 2014.09.03)

라. 대러관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 북한은 러시아와의 고위급인사 교류 및 북한 내륙철도 현대화 사업 착수 등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급속히 강화
 - 러시아는 북한에 100억 달러 부채 탕감, 총연장 3000여km 철도 보수 약속, 루블화 결제화폐 지정 허용 등 경제협력에 박차
 - 특히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통해 경제를 비롯한 정치, 군사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확대를 시도
- ※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방러는 지난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0월 리수용 외무상과 11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이은 것으로, 올해 들어 북한 고위급 인사의 네 번째 러시아 방문

[전통적 우호관계 재확인 및 관계 증진 발판 마련]

- 최룡해 당 비서의 방러는 올해 들어 급속히 강화된 양국 간 우호관계 재확인 및 관계 증진을 위한 발판 마련 측면에서 나름 성과를 거양
 -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대한 기본적 공감대를 형성
 - 핵문제 및 인권문제 관련 러시아의 지지 유도과 더불어 군사·경제 분야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 ※ 최 비서와 동행한 노광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11월19일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과 회담했으며 같은 날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회담

1. 북한 내부정세 전망

가. 정치분야

[당 창건 70주년을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강화 계기로 적극 활용]

-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의 위상과 역할 제고,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강화, 가시적인 경제성과 창출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 이의 관철을 적극 독려할 것으로 전망
 -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5년 70주년 준비를 2014년부터 본격 추진 의지를 표명
- 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규모 노력동원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 이를 위해 ‘당 창건 70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전 사회적인 ‘대고조 열풍’을 고취
 - 특히 당 창건 기념일을 목표로 ‘200일 전투’ 같은 전당·전국 차원의 노력동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관측

[무리한 노력동원으로 주민불만과 동요 증대]

- 당 창건기념일까지 가시적 경제성과와 주민생활 향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주민불만과 동요, 비관주의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

- 무리한 노력동원 조건 하에서 주민통제가 강화되고 시장 활동이 억제될 경우 주민불만은 더욱 증폭
- 또한 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정치행사와 캠페인이 간소화될 경우 침체분위기 확산

나. 군사분야

[대남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

- 매년 초반에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조성해오던 대남 군사적 긴장을 예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
 -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월부터 시작되는 북한군 동계군사훈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 실시
 - 특히 김정은의 ‘무력통일론’을 둘러싼 군 상층부의 충성경쟁이 가세, 군사적 긴장이 과열될 가능성

[강도 높은 군사훈련 실시와 비대칭 전력 증강 지속]

- 북한군의 취약점 보강 및 한국군의 군사방어능력 대응 차원에서 기습·선제·침투공격을 위주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
 - 2014년에 지역별·군종별로 한정 실시한 군사훈련을 2015년에는 국가급·군급 규모로 확대 실시
- 2015년에도 비대칭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다종·다양의 로켓·전술유도탄, 단거리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정밀도 향상을 위한 개발을 지속
 - 기습공격 능력의 핵심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

[군에 대한 대규모 위무성 행사 지속]

- 김정은의 군유일명령체계 공고화를 넘어 군대의 이반 차단을 위한 대규모 군 위무성 행사 개최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 이어 연대장·여단·사단급 정치군사간부대회, 내무군·여군 열성자대회, 젊은 세대를 겨냥한 ‘북한군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당창건 70주년 계기 김정은의 군관련 치적 과시]

- 당 창건 70주년 기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실시 등 대대적인 경축 분위기를 조성, 김정은 치적 과시 및 내부결속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
 - 대규모 군사퍼레이드 개최 시 첨단 및 재래식 군사력 시위

다. 경제분야

[시장의 확대와 당국의 시장 활용]

- 2015년에도 북한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당국의 통제는 느슨해 질 것으로 전망
 - 올해 시장부문의 활성화가 북한 경제지표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관성을 유지할 필요
 - 북한당국은 내부의 원활한 공급과 경제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확대를 체제유지 차원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

[생산구조의 개선없는 지속 성장의 한계]

- 북한 경제의 저성장세는 생산요소 투입의 확충으로 생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한된 수준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실정
 - 농업생산구조의 근원적 개선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비료·농자재 등 투입재 공급 부족으로 농업생산 증가 지속 난망시
- 경제개혁 조치는 정치·사회적 파급영향을 조절하면서 현재의 패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병진노선 고수에 따른 경제정책의 담보상태 유지]

- 핵·경제 병진노선을 비롯한 체제유지 중심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현재 시도 중인 경제정책은 담보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대외관계 악화에 따른 외부지원 감소와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대외교역 악화 및 외화난 가중 야기
 - 국제적 고립이 계속될 경우 밀무역, 해외 인력 송출 등 독자적인 외화획득 수단을 더욱 늘릴 가능성도 불배제

[교역루트 다변화 시도]

- 북한은 대중 무역의존도 탈피 및 교역선 다변화 차원에서 경험 및 교역 확대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상존
 - 내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외적으로 자원과 재원의 지속적 도입 이 필요
 - 이런 맥락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중·러 등 전통적 우호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

라. 사회문화분야

[노동당 창건 70주년 계기 사회·문화적 경축 분위기 조성]

-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체육강국’ 열풍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대형 문화기획을 통해 내부결속을 도모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
 - <아리랑 축전>과 유사한 대형 집체행사 개최로 대대적인 경축 분위기와 김정은에 대한 충성 분위기 조성

[사회·문화계 차원의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김정은식 ‘爲民정치’ 시현]

- 김정일 3년 탈상 후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강화 차원에서 사회·문화계를 중심으로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 김정은 영도과학, 영도체육, 영도문학, 영도예술 등을 정립
- 북유럽 복지국가를 벤치마킹해 ‘인민 존중과 인민 사랑’에 기초한 김정은식 爲民정치로 인민들의 충성을 도모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사회보장제도 복구 주력]

- 북한은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김정은 치적쌓기의 일환으로 대규모 전시성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
- 동시에 국가재정능력이 허락된다면 붕괴된 사회보장제도의 복구에도 점차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

〈표 3〉 2015년 북한 내부정세 전망

구분	주요 내용
정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창건 70주년을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 계기로 적극 활용 ○ 무리한 노력동원으로 주민불만과 동요 증대 가능성
군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남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 ○ 강도 높은 군사훈련 실시와 비대칭 전력 증강 지속 ○ 군에 대한 대규모 위무성 행사 지속 ○ 당창건 70주년 계기 김정은의 군관련 치적 과시
경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확대와 당국의 시장 활용 ○ 생산구조의 개선없는 지속 성장의 한계 ○ 병진노선 고수에 따른 경제정책의 답보상태 유지 ○ 교역루트 다변화 시도
사회문화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 창건 70주년 계기 사회·문화적 경축 분위기 조성 ○ 사회·문화계 차원의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김정은식 위민정치 시현 ○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사회보장제도 복구 주력

2. 남북관계 전망

가. 정치군사분야

[주도권 확보 경쟁의 지속과 대남 도발 가능성의 상존]

-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한국의 책임있는 사과 요구에 대해 북한은 전단 살포 및 군사훈련 비난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핵무력 강화 등 근본적인 군사 노선의 변화가 없는 한 남북군사관계 개선 전망은 불투명

- 북한은 2015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성 의사를 표명, 대남 도발의 명분으로 이용할 가능성 불배제
- 2014년 실시한 실전대비훈련은 군 기강 확립이나 군사력 과시 차원을 넘어 무력도발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시할 필요

[서해 NLL상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 서해 서남전선군사령부(NLL 관할)의 공개적인 도발위협 증가 추세를 유추할 때, 서해에서의 군사적 도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북한군 서남전선군사령부는 금년 8.13 보도, 6.26 중대보도, 5.26 대변인 성명, 5.23 공개보도, 5.20 공개보도를 발표하고 4.29 연평도 및 NLL인근 해상에서 포사격훈련을 실시

나. 경제협력분야

[5.24 조치의 일방적 해체 난망시]

- 내년에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5.24 조치 일방적 해제는 난망시
 - 북한 스스로 5.24조치 해제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한 데 오히려 전단살포와 같은 돌발변수에 과민하게 반응
 - 정부가 전단 살포와 같은 제2, 제3의 돌발변수를 통제하는 데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실정법 상 한계

[일부 남북경협사업의 재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24 조치의 재량권을 이용, 북한의 태도와 주변 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
 - 5.24조치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조치가 아니라 정부의 재량 조치이므로 그 집행 역시 정부의 재량에 소속
-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재량권 행사로 5.24조치의 신축적 집행이 이루어지면 일부 남북경협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이 호전

다.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지속]

-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북한도 북핵문제와 연계하지 않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호응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정치·군사분야와는 별개로 비정치 분야의 사회문화교류협력 역시 지속·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
 - 북한도 정치적 영향이 적은 문화 및 체육분야를 중심으로 호응할 것으로 기대

〈표 4〉 2015년 남북관계 전망

구분	주요 내용
정치군사분야	○ 주도권 확보 경쟁의 지속과 대남 도발 가능성의 상존 ○ 서해 NLL상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경제분야	○ 5.24 조치의 신축 적용 ○ 일부 남북경협사업의 재개
사회문화 및 인도적 지원분야	○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지속

3. 대외관계 전망

가. 대중관계

[대중 관계 회복 노력 경주]

-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 흐름을 타고 북·중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당 창건 70주년 행사의 의미 부각 측면에서도 중국 지도부의 대거 참석이 필요
 - 북한은 최근 대러관계 긴밀화 노력을 통해 중국의 대북 입장 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반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시
 -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에 대응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단행을 방관할 수 없는 상황

[대중 관계의 전략적 조절]

- 북한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중국의 대북 압박 수준을 고려하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
 - 중국 對 한·미·일 대립구도가 유지되는 한 북한의 전략적 자산가치가 작동한다는 정세인식에 바탕
- 따라서 북한은 對 일·러 관계 개선 및 증진에 주력하면서 대미 접근을 타진하는 등 일종의 헛징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중국 견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 북·중관계의 장기 담보는 김정은체제의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 북·중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

[6자회담 재개를 매개로 한 대중 접근]

-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베이징 합의+a’를 수용하여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대가로 양국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김일성과 김정일의 ‘조선반도 비핵화’ 유훈에 따른 ‘김정은의 통 큰 결단’이라는 논리로 포장

나. 대미관계

[미·북관계 개선 가능성 불투명]

-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및 ‘맞춤형 억제전략’에 4차 핵실험 업포 등 핵능력 고도화 위협으로 맞설 것이므로 관계개선의 실마리 찾기는 난망시

- 미국이 북핵 능력 고도화 차단 목표 하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완화시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 마련 여지 존재
 - 이란 핵문제 해결 진전에서 자신감을 얻은 미국이 북핵 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해 적극적 접근 태도 시현 가능성
 - ※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10.24 미 국방부 기자회견)
 - ※ 사일러 미 6자회담 특사, “6자회담 재개에 북 비핵화가 선결조건은 아니다”라고 언급(한겨레, 2014.10.30)

[현안을 매개로 한 미·북 간 공방 지속]

- 북한은 미국의 공세적 대북 인권문제 제기를 양국관계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가능성
 - 미국은 비핵화와 인권 개선 동시 압박을 통해 북한을 양자택일 상황으로 몰이
 - 북한은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도 인권상황이 열악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
 -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초청, 인권대화 제의 등 인권 대응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예상

다. 대일관계

[납치자문제 해결을 둘러싼 斷續과정 시현]

- 김정일에 비해 납치 책임이 덜한 김정은은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해결은 난망시

- 북한은 전후 잔류일본인과 일본인배우자의 생존여부나 유골 확인에 적극성 시현
- ※ 현재 북한에는 청진과 평양 지역 등을 중심으로 2만기 정도의 일제 강점 당시 일본인 유골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연합뉴스, 2014.3.5)
- 북한은 납치자문제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는 대신, 국교정상화와 경제 원조를 획득하는 데 치중
- 반면, 일본은 모든 피해자 귀국,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일본 인도라는 공식 입장을 견지
- 한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 감행시 인도주의적 문제라 할지라도 북·일관계 진전은 난항이 예상

[북·일 국교정상화 과정의 난항]

- 북한은 납치자문제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일본대표단의 추가 현장검증 문제를 국교정상화회담 재개에 이용하려는 의도
 - 지난 9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정부간 협의 결과에 의거, 일본의 실무점검단이 방북(10.27~30)했으나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
- 납치자문제 해결에서의 다소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주변정세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상회담이나 국교정상화 실현은 난망시
 -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및 북·미 국교정상화는 북·일 국교정상화의 선행조건이며 아베 총리의 방북도 북핵문제 진전 없이는 가능성 저하

라. 대러관계

[북·러관계 긴밀화 지속]

- 2015년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관계의 新밀월기를 맞을 뿐 아니라 동북아 외교판도에도 변화가 예상
 - 최룡해는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2015년에 양국 간 친선협조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나갈 것을 제의
 - ※ 양국이 해방과 전승 70주년을 맞는 2015년에 러시아와 공동 경축행사를 진행하고 대표단을 교류하기로 했다고 보도(조선중앙통신, 2014.11.25)
 - 북·중 정상회담에 앞선 북·러 정상회담 개최로 러시아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확고한 우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
- 최 비서 방러를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된다면 양국관계의 긴밀화 추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양국 간 낮은 수준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나선경제특구와 러시아 극동지방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

[북·중관계 대체의 한계]

- 북·러 정상회담 성사는 북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 무조건 개최되기 어려우므로 관망이 필요
- 북·러가 새로운 밀월관계로 가면 북한과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
 - 중·러관계의 긴밀화 추세 속에서 양국은 경쟁을 꺼릴 것이고 중국의 대북 교역과 지원 규모, 지금까지의 관계 등에서 큰 차이

정책적 고려사항 및 제언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지]

- 북한은 다양한 목적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군사적 도발을 억지할 필요
- 북한의 군사적 도발시 강력한 응징조치가 수반될 것이라는 선언적 억지와 더불어 대비태세 강화를 통한 실천적 억지력을 과시
-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에서의 안보딜레마를 가중,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을 궁지로 모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
- 주변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동억지’를 추진

[북한의 경제특구 활용]

- 나선특구 등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주력하는 경제특구들 중 접근이 용이한 특구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
 - 우리 기업의 단독진출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중국·러시아 기업들과의 공동 진출 방안도 고려

- 국제기구,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요 대북 진출 루트를 확보한 국가들과 북한 진출을 목표로 한 경제협력을 강화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실효적인 남북협력 구상]

- 북한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해 대남 유화책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 북한의 실질적 변화 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
-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해 인도주의적 대북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대민 전달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지원과 교류방식을 강구
- 남북경협 재개 및 확대시 금강산관광 등 북한사회와 단절된 사업보다는 개성공단과 같은 대민 영향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 경제 지원 및 투자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되 장기적인 통일비용 절감 차원에서 북한 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최대한 우선시
- 북한의 경제개혁 중점부문인 농업·경공업부문 인프라 지원과 수산, 축산 등 식품관련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 북한의 자급능력을 제고
- 북한의 취약한 물류망 개선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계하여 국제협력 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

[선 남북관계, 후 미·북관계 구도 형성]

- 미국이 북핵 능력 고도화 차단 목표 하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완화시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 마련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이 소외당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미공조를 유지

-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미·북관계 개선이 용이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
 - 미국은 북한의 통미봉남전술을 부담스러워하므로 남북관계 개선을 거쳐 미·북관계 개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지
 - 북·일관계과 남북관계에서 돌파구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미·북관계 개선의 통로가 열릴 것이라는 점을 각인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편승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

-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의 대북 인권문제 해결 노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편승하여 이산가족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주력
 - 북한에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 석방 문제를 우선 추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남북경협 연계 추진]

-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초국경협력을 골자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관련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
 - 특히 한국의 동해안과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을 잇는 물류망 확충을 통한 상생과 공영을 도모
- 남북한 육상운송망 연결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필수적이므로 남북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병행하여 성사시키는 것이 긴급
-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향후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북한을 동북아 경제협력의 틀로 견인하는 시범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

[광복 70주년 계기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

- 정치적 갈등요소가 적고 북한주민에 대한 파급영향이 큰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에서 신뢰의 단초를 마련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 이런 맥락에서 8.15 경축사에서 제의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 행사를 적극 추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0 (도곡동, 인스토피아 B/D)
Tel. 02-572-7090 / Fax. 02-572-3303

-
- 발 행 인 / 유성욱
 - 편집위원 / 서동주, 이기동
 - 발 행 일 / 2014년 12월 30일
 - 인 쇄 / (주)늘품플러스 ☎ 070-7090-1177
-